

‘재부상하는 인도’

2015~16 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 분석

CONTENTS

목 차

요 약 /

I. 재부상하는 인도 경제	3
4	1. 인도의 전략적 가치
9	2. 인도 경제 현황
15	3. 모디 시대 인도의 변화
II. 2015~16 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	19
20	1. 예산안 개요
29	2. 부문별 주요 내용 - 경기부양책, 기업 경영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확대, 조세제도 개혁, 인프라 투자 확대, IT산업
50	3. 새해 예산안에 대한 우리기업 반응
III. 우리기업 진출 여건	52
53	1. 한국의 대인도 교역 현황
56	2. 기회요인
57	3. 위협요인
IV. 인도 진출 방안	56
59	1. 권역별 진출 차별화
61	2. 전략육성산업 및 수요급증 유망분야 진출
65	3. 시사점

요약

인도 정부가 성장드라이브 예산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인도가 투자 유망국으로 재부상하고 있다.

모디 정부가 성장 위주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국내 제조업 부흥을 통한 고용창출,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 비즈니스 환경 개선, 외국인 투자 확대, 조세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디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상품 및 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 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안에는 농민들과 소외계층을 끌어안기 위해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국제유가 하락 등 글로벌 경기와 공기업 주식 매각 및 유류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도 정부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는 모디 정부의 경제개혁에 힘입어 인도 경제성장률이 2015년 6.3%에서 2016년 6.5%를 기록하며 중국 경제성장률을 상회하고, 2018-2019년에는 6.7%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 인구가 2011년 12억 1,000만명에서 2025년 14억 6,900만명으로 증가하여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중소·중견기업들도 거대한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를 보유한 인도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수요가 급증하며 유망분야로 떠오르는 산업군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이며, 인도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철도, 스마트시티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에 우리기업 진출이 유망하다. 소비재시장은 연간 37%씩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진출이 가능하며,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철도 및 스마트시티 건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민관협력 (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진출이 유망하다.

인도 투자 진출의 경우, 진출 목적(내수, 수출·생산거점) 및 목표시장, 제품 및 사업특성에 따라 권역별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자동차 및 IT/BT 산업은 외국계 자동차 및 글로벌 IT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남부가 유망하며, 바이오산업은 최근 인도정부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서부지역, 소비재산업은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북부지역이 유망하다.

인도는 권역별로 유망산업 및 중점산업이 상이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리스크를 신중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은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진입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현지기업 M&A도 고려할만 하다.



I

재부상하는 인도 경제

1. 인도의 전략적 가치
2. 인도 경제 현황
3. 모디 시대 인도의 변화

1

인도의 전략적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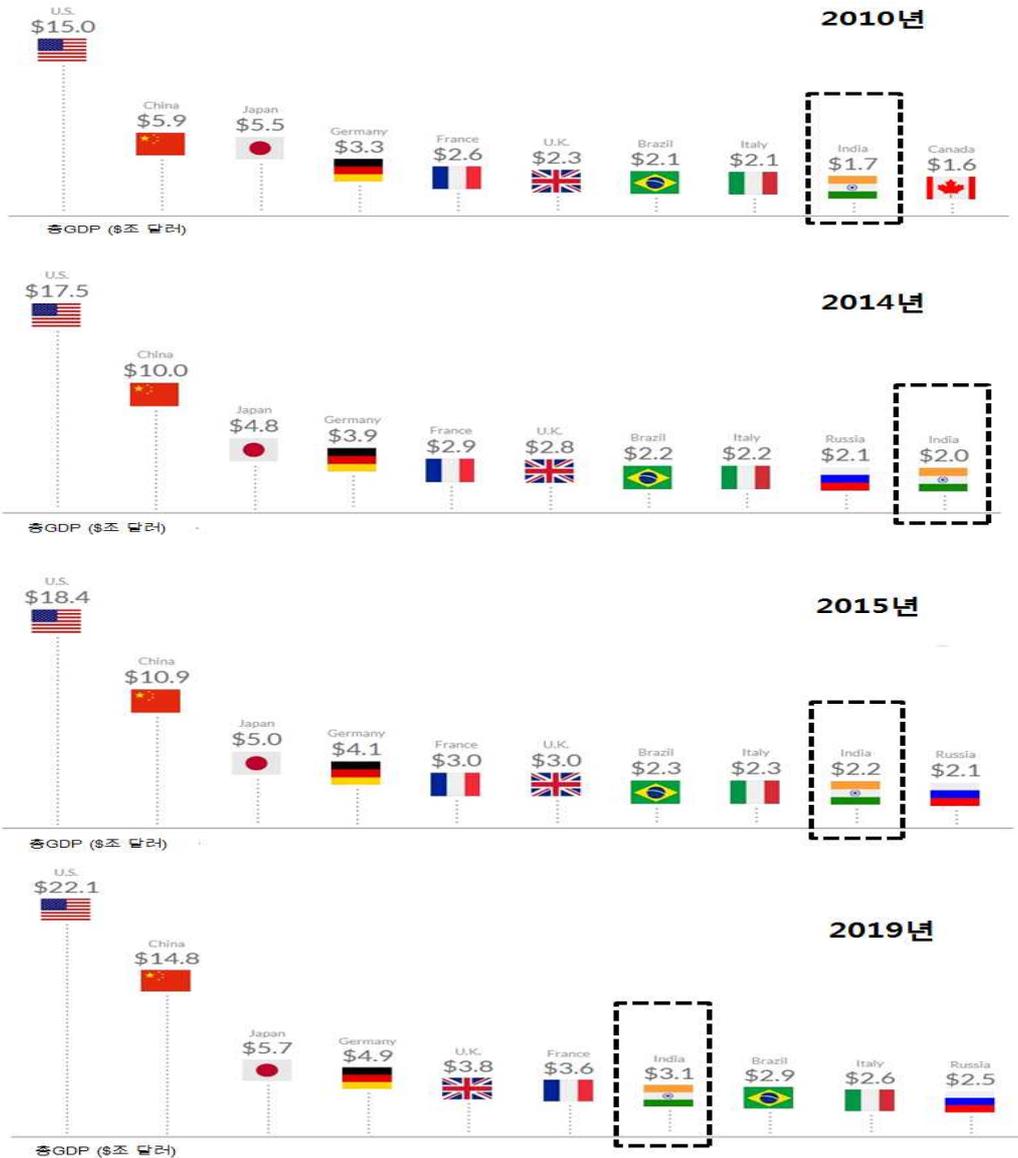
1

경제규모와 경제성장률

□ 2019년 세계 7위 경제대국 전망

- 2015년 인도의 국내총생산(GDP)은 2조 2,000억 달러를 기록하여 세계 경제규모 9위에 등극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에는 GDP 3조 1,0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경제규모 7위에 올라설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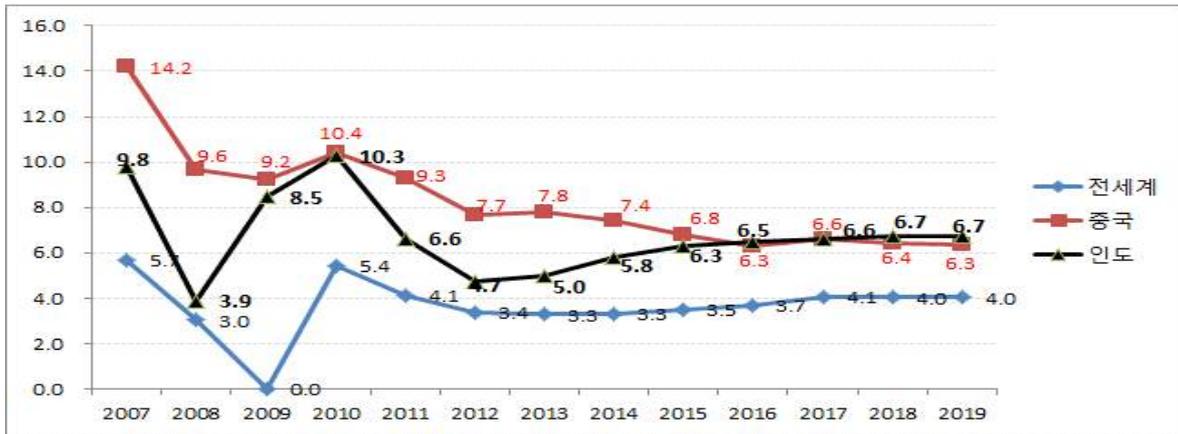
[전세계 경제규모 순위 변화 추이]



□ 인도 경제, 2016년부터 중국 경제성장률 상회 전망

- 인도 경제성장률은 2015년 6.3%에서 2016년 6.5%를 기록하며 중국 경제성장률을 상회할 전망이며, 2018-2019년에는 6.7%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인도 경제성장률 추이]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세계	3.5	3.7	4.1	4.0	4.0
중국	6.8	6.3	6.6	6.4	6.3
인도	6.3	6.5	6.6	6.7	6.7

* 자료원: IMF(2015.1)

□ 글로벌 산업 및 원천기술 보유

- 인도는 주요산업 제조·생산에 있어 전세계 5위안에 들어 있는 산업이 많으며, 특히 슈퍼컴퓨터를 자체 제작하는 전세계 3개국 중 하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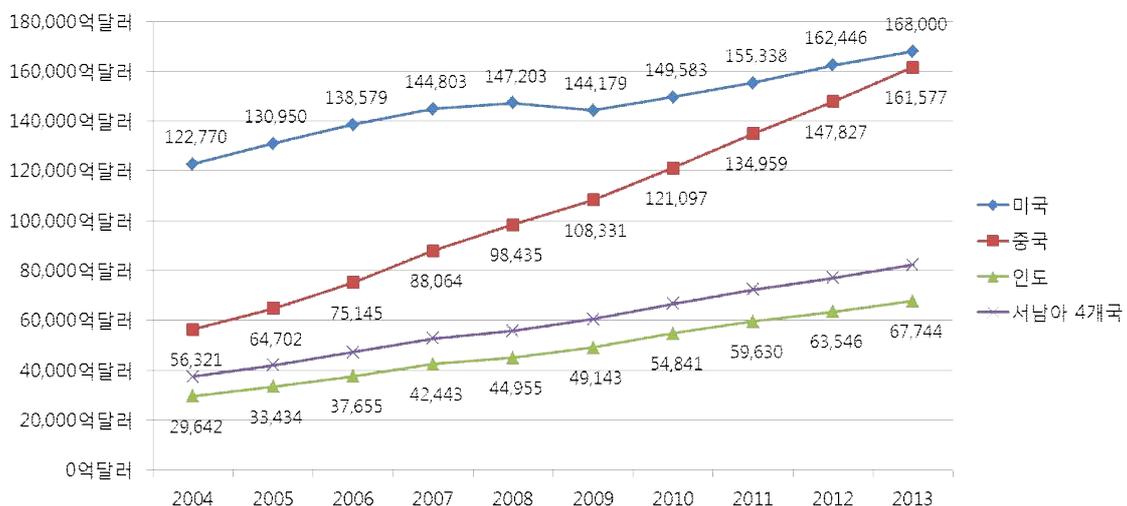
[세계 속 인도]

■ 슈퍼컴퓨터 자체제작, 세계 3개국 가운데 하나	■ 아시아 2위 과일 및 채소생산국
■ 인공위성 자체 발사, 세계 6개국 가운데 하나	■ 세계 3위 식량생산국
■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수,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 세계 2위 소형차 생산국
■ 포준 500개 기업 중, 100개사가 인도 내 R&D 시설 운영	■ 세계 10위 수산물 생산국
■ 인도 제약산업 규모,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	■ 매년 공대생 50만명 배출

□ 2025년 세계 1위 인구대국으로 등극 전망

- 인도는 2011년 기준 12억 1,000만명 인구를 보유,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인구대국임. 인도의 인구는 2035년 15억명, 2050년에는 16억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025년 인도의 인구는 14억 6,900만명을 넘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대국으로 등극 전망
 - 현재 인도 인구의 절반이 25세 이하이며, 2020년에는 4억 2,500만명 이상의 노동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
- 전체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중산층 가정의 연평균 소득이 15% 이상 늘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어 인도 소비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인도의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를 기록.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는 '11년 기준 4조 4,6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종전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4조 4,400억 달러)을 제치고 3위에 등극

[상위3개국 구매력평가(PPP) 기준 GDP]



* 자료원: World Bank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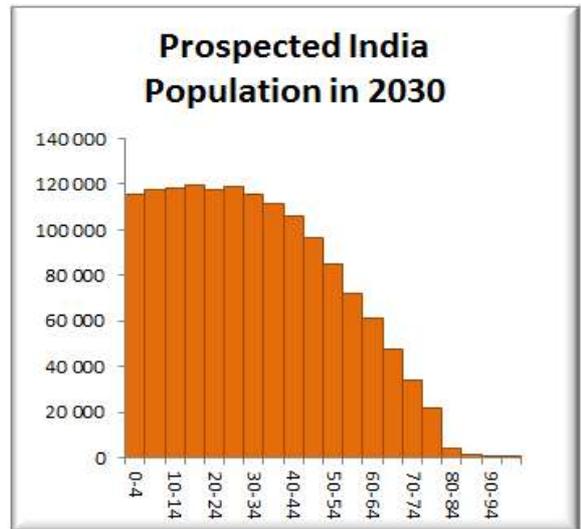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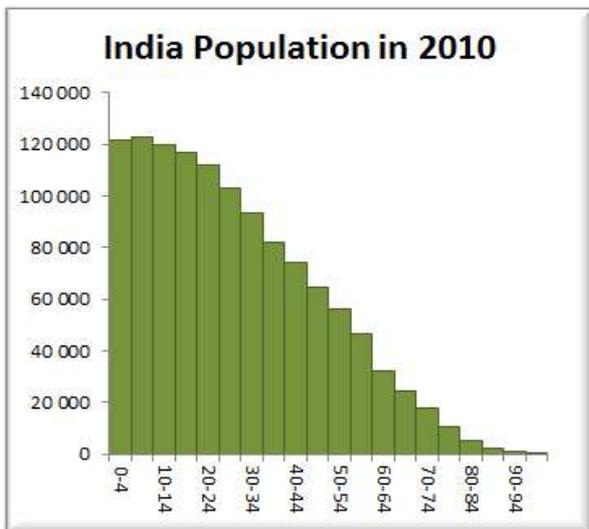
- 비약적으로 팽창하는 내수시장과 함께 늘어나는 중산층 소비자들로 인도의 소비재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 * 인도 휴대폰 가입자 수 : ('10) 5억84백만 명 → ('13) 9억98백만 명
 - * 인도내 차량 수 : ('03) 6,700만 대 → ('12) 15,900만 대로 증가, 10년 간 연평균증가율 10%
- 인도 중간소득층 및 고소득층 비율은 낮은 편이나 절대 수는 많은 편으로, 인도의 중산층 이상 인구는 1억 8,000만명으로 이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인구를 모두 합친 규모와 동일
 - 2008년 세대 당 연간가처분소득 \$5,000 달러 이상의 인구는 2억명을 넘어섰으며, 3만5,000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은 800만명을 초과

3 | 풍부한 고급 인적 자원 보유

□ 인도는 분야별 핵심인재와 풍부한 인적자원 확보 환경이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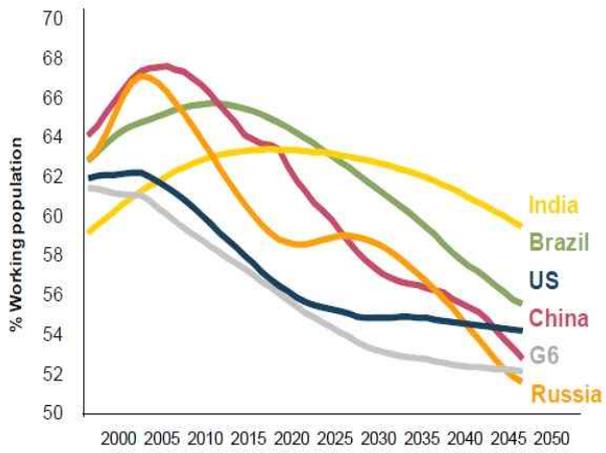
- 인도의 노동연력인구는 2035년 전체 인구의 68.4%를 차지하며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
 - 인도의 풍부한 인적자원은 경제성장의 핵심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IT 및 서비스산업에 고급인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전망

[인도 연령별 인구변화 전망 (2010년 → 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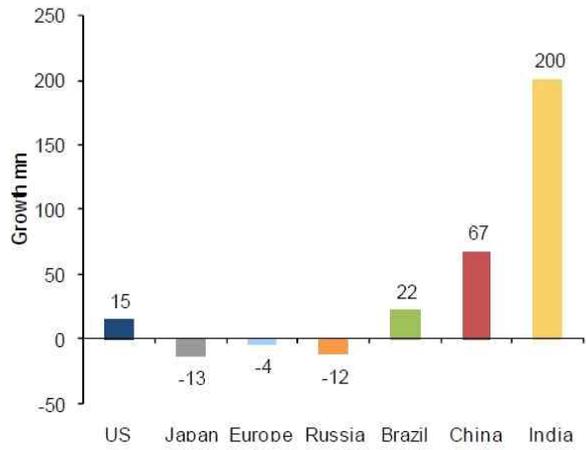


* 자료원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전체 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율(%)]



[신규 노동인구 (백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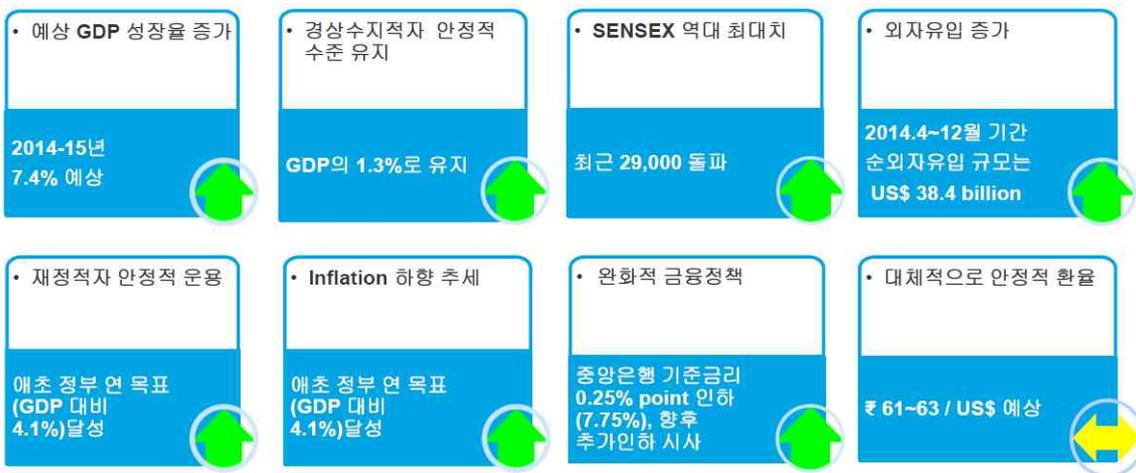


* 자료원 : Morgan Stanley India Research Report

2 인도 경제 현황

□ 인도 경제 동향

- 인도 경제는 모디 총리의 개혁드라이브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반영되어 모디 총리 취임이후 '14년 3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3플랜(2년간 적폐해소, 3년차부터 성장), 인프라 개발 확대, 제조업 육성, FDI 유치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에 힘입어 2017-18년 인도 경제성장률(6.8%)은 중국(6.5%)을 추월할 전망이다.
- 특히 국제유가 하락 등 글로벌 경기도 호전적이어서 모디 총리의 개혁 정책 추진에 긍정적 요인으로 반영되고 있음.
 - 인도는 세계 5위의 에너지 소비국으로 석유는 인도 전체 에너지 소비 중 30%를 차지하는데, 국내 석유 수요의 84%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유가는 정부재정 및 인도 경제 전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
 - 국제유가 하락으로 정부재정적자가 축소되고, 연료보조금 축소 등으로 늘어난 정부재정 여유자금으로 공공서비스 및 SOC 등 인프라에 투자하여 국내 경기부양책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게 되었음.
 - 또한 소비자 물가도 6% 이하로 안정화 되고 있어, 인도 경제는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자료원 : Deloitte

- 주요 신용평가사는 2014년 인도 경제전망 평가를 긍정적으로 전환
 - S&P: 인도 국가신용등급 장기전망(향후 2년) 상향조정, 'BBB-부정적 → BBB 안정적'
 - 무디스: '15년 경제성장률 5-6%로 전망'
 - 노무라증권: 인도를 고성장과 저물가의 골디룩스(Goldilocks) 진입단계로 평가

□ 외국인 투자 현황

- 모디 정부의 각종 분야 FDI 한도 상향 조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인도 내 신규투자를 계획하고 있음.
 - * GE, 아마존, 지멘스, 테크닉, 시스코, 소프트뱅크, 혼다, 스즈키, 현대차 등

[각 분야 FDI 한도 상향 조정]

방산/보험	26% → 49% (방산은 향후 74%까지 추가 개발 전망)
고속철/전용화물철도	민간 100% 개발
주택건설, 타운십, 쇼핑몰 개발	100% 허용

- 2013-14 회계연도 인도로의 FDI 유입 규모는 총 242억 9,9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산업별로는 서비스, 건설, 통신, 컴퓨터(S/W, H/W) 산업에 FDI 규모가 높았음.
 - * 인도는 전통적으로 제조업 보다 서비스산업으로의 FDI 유입이 높음.
- 글로벌투자자들의 인도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2014년 4-8월간 FDI 유입은 전년 동기대비 42%나 증가했으며, 2016년 인도로 유입된 FDI는 2015년 대비 13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대인도 상위투자국은 모리셔스가 2013-14 회계연도에 약 49억 달러를 투자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뒤를 이어 싱가포르(약 60억 달러), 영국(약 32억 달러), 일본(약 17억 달러) 순

[對인도 상위 투자국별 FDI 유입 규모]

순위	국 가	2012-13		2013-14	
		천만루피(₹)	백만달러(\$)	천만루피(₹)	백만달러(\$)
1	모리셔스	51,654	9,497	29,360	4,859
2	싱가포르	12,594	2,308	36,625	5,985
3	영국	5,797	1,080	20,426	3,215
4	일본	12,243	2,237	10,550	1,718
5	네덜란드	10,054	1,856	13,920	2,270
6	미국	3,033	557	4,807	806
7	키프로스	2,658	490	3,401	557
8	독일	4,684	860	6,093	1,038
9	프랑스	3,487	646	1,842	305
10	스위스	987	180	2,084	341
연간 FDI 총규모		121,907	22,423	147,518	24,299

* 주1 :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년도 3월 기준

* 주2 : 총 FDI 규모는 모든 국가를 포함

* 자료원 : 인도 산업정책부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인도 산업별 FDI 유입 규모]

순위	산 업	2012-13		2013-14	
		천만루피(₹)	백만달러(\$)	천만루피(₹)	백만달러(\$)
1	서 비 스	26,306	4,833	13,294	2,225
2	건 설	7,248	1,332	7,508	1,226
3	통 신	1,654	304	1,987	1,307
4	컴퓨터(S/W,H/W)	2,656	486	6,896	1,126
5	제 약	6,011	1,123	7,191	1,279
6	자 동 차	8,384	1,537	9,027	1,517
7	화학(비료 제외)	1,596	292	4,738	878
8	전 력	2,923	536	6,519	1,066
9	금 속	7,878	1,466	3,436	568
10	호텔 및 관광	17,777	3,259	2,949	486
합 계		82,433	15,168	63,545	11,678

* 주1 :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년도 3월 기준

* 주2 : 서비스 산업은 은행·보험 등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아웃소싱, R&D, 운송, 기술 시험분석을 포함

* 자료원 : 인도 산업정책부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 Promotion)

- 인도정부는 지속된 경기침체국면 전환을 위해 '13년 7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바 있으며 모디 정부 역시 규제완화에 역점
 - 통신, 자산재건회사, 부동산 재건축회사의 외국인투자를 100%까지 허용
 - * 보험, 석유정제, 전력거래, 보험 분야의 승인방식 49% 한도까지 자동승인 방식으로 변경
 - * '14년 7월 국방, 철도, 보험을 비롯한 다수의 산업분야 FDI 한도 확대

[인도정부의 FDI 규제 완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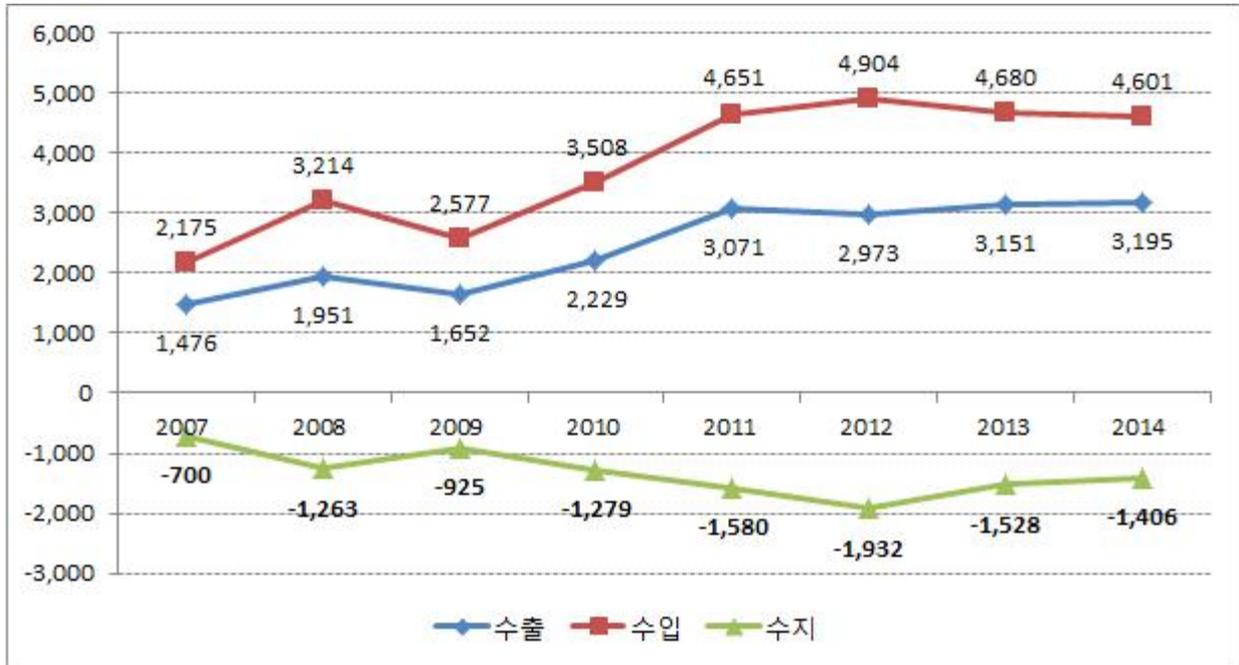
분야	투자한도	승인방식
통신	100%	~49% : 자동승인 49~100% : FIPB 승인필요(2013)
단일 브랜드 소매업	100%	~49% : 자동승인 49~100% : FIPB 승인필요(2013)
보험	26%→49%	~49% : 자동승인(2013)
국방	26%→49%	2014
자산재건회사	100%	~49% : 자동승인 49~100% : FIPB 승인필요(2013)
철도	100%	2014
신용정보회사	49%→74%	~74% : 자동승인(2013)
운송서비스	100%	~100% : 자동승인(2014)
전력거래	49%	~49% : 자동승인(2014)
석유정제, 천연가스	49%	~49% : 자동승인(2013)
부동산재건축회사	100%	~49% : 자동승인 49~100% : FIPB 승인필요(2014)
차 농업 (차 플랜테이션 포함)	100%	~100% : FIPB 승인필요(2014)
상품거래	49%	~49% : 자동승인(2014)
보안업계 인프라회사	49%	~49% : 자동승인(2014)

□ 수출입 현황

- 2014년 인도의 총교역규모는 7,796억 달러로 수출 4,601억 달러, 수입 3,195억 달러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 인도의 무역수지는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수출이 증가되고 수입이 감소되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감소

[인도의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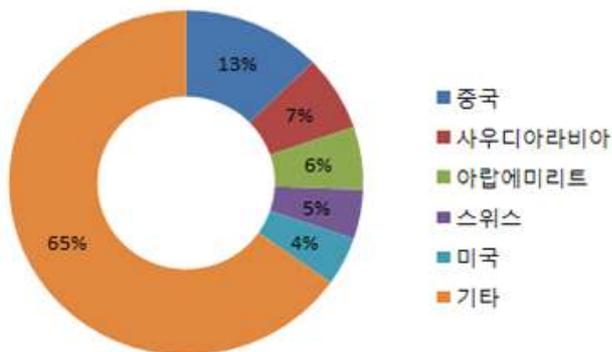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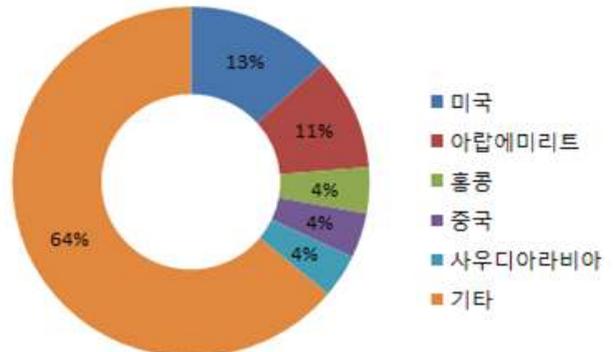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인도의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2014년 인도 전체 수입 가운데 13%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사우디아라비아(7%), 아랍에미리트(6%)도 인도의 상위수입국으로 기록
- 인도의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2014년 인도의 전체 수출 가운데 미국의 수출은 13%를 차지했으며, 아랍에미리트(11%), 홍콩, 중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4%를 차지하여 수출과 수입 모두 신흥국과의 교역규모가 선진국보다 높음.

[인도의 수입상위국 (2014)]



[인도의 수출상위국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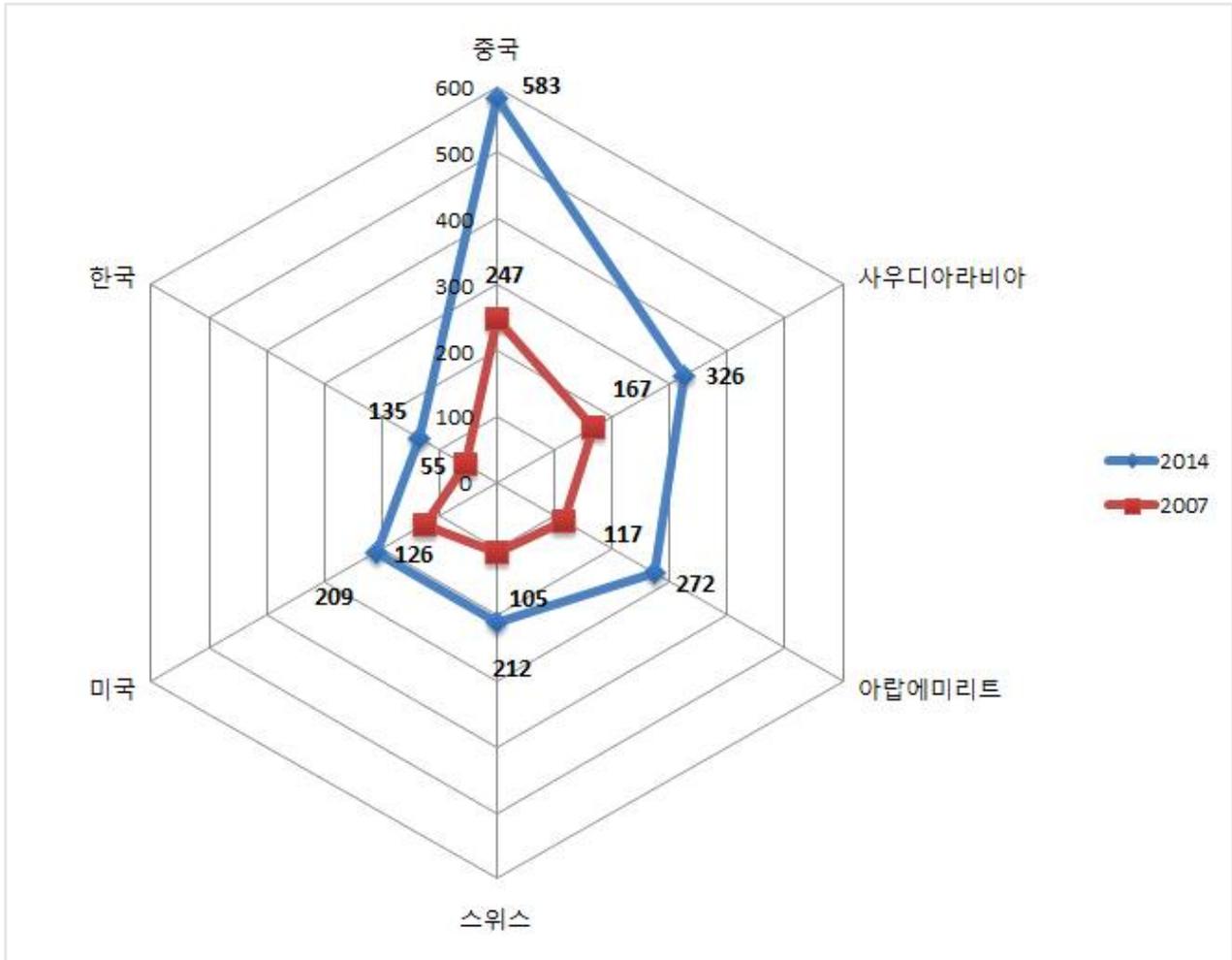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 특히 인도의 對중국 수입규모는 '07년 247억1,100만 달러에서 '14년 582억7,8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며, 인도의 對한국 수입은 '07년 54억7,700만 달러에서 '14년 135억2,200만 달러로 증가

[인도의 수입상위국 vs 한국 비교 (2007 vs 2014)]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Global Trade Atlas

3 모디 시대 인도의 변화

□ 모디 총리의 인도 경제 개혁

- 지난 7개월 모디 개혁정책은 빅뱅보다는 소폭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개혁 2년차인 금년부터 대규모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모디 정부 개혁 핵심 내용]

현장중시 리더십, 굿거버넌스로 강한 인도 구현		
인프라 투자 확대	찾아가는 리더십	투명한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 메트로, 철도, 도로, 항만, 수처리 등 • 100개 스마트시티, 5개 산업회랑 건설 • 대형개발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신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방문, 직접 설득 • 솔선수범의 자세 • 정책추진력 및 속도 제고 • 중앙정부 영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활성화(전자신문고) • IT네트워크 확대, 디지털 융합화 • 온라인 인허가신청, 의무처리 기한 설정
포괄적 성장, 포괄적 금융, Make in India → 사회통합과 지속성장		
포괄적 금융	사회통합, 위생 강화	Make in In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저소득층 금융기관 이용 • 보조금 은행계좌 입금, 부패방지 • 소규모 마을 은행지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부 자치기구 권한이양 • 바코드 배급카드 보급 • 모델마을 개발, 화장실 확대(Clean In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 창출, 혁신 허브 • 사업환경개선, FDI 유치 • 수출제조기지화 • 무결점 의식개혁

□ ‘Make in India’ - 제조업을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 모디 총리는 2014년 8월 15일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Make in India를 최초로 언급한 이후, 제조업 부흥을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



“I want to appeal all the people world over... Come, Make In India! Sell anywhere but manufacture here.”
 (모디총리 독립기념일 연설, 14.8.15)

- 2014년 9월 25일 모디 신정부는 각종 규제 완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제조업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경제산업 혁신정책 추진을 위해 ‘Make in India’ 캠페인 발표
- Make in India 정책은 역대 가장 광범위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인도를 세계 최대제조기지로 도약시키는 것이 핵심 목표임.

□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에 총력

- 모디 정부는 인도가 거대 내수시장 및 지리적 요충지 등 전략적 가치를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인프라, 불합리한 조세제도로 인해 외투기업들이 투자를 꺼려하고 경영상 애로사항이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유치를 강화하고 있음.
- 방위산업 및 보험업 분야 외국인 직접투자 한도를 기존 26%에서 49%로 확대하며, 방산분야에 약 370억 달러의 예산 배정
-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철도/도로, 관개시설, 도시개발, 수처리 등 인프라 프로젝트 부양을 위해 인프라 부문 예산을 전년 대비 24% 증액
- 인도는 World Bank가 발표한 전세계 기업경영환경 종합순위에서 전체 189국 가운데 142위를 기록했으며, 조세납부에서는 156위, 건설허가 취득에서는 184위, 계약강요에서는 186위를 기록하는 등 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

[기업경영환경 종합순위]

국가	종합 순위	사업 개시	건설허가 취득	전력 확보	재산권 등록	신용 획득	소액투자자 보호	조세 납부	역내 무역	계약 강요	지불불능 해결
싱가포르	1	6	2	11	24	17	3	5	1	1	19
뉴질랜드	2	1	13	48	2	1	1	22	27	9	28
홍콩	3	8	1	13	96	23	2	4	2	6	25
덴마크	4	25	5	14	8	23	17	12	7	34	9
한국	5	17	12	1	79	36	21	25	3	4	5
노르웨이	6	22	27	25	5	61	12	15	24	8	8
미국	7	46	41	61	29	2	25	47	16	41	4
영국	8	45	17	70	68	17	4	16	15	36	13
캄보디아	135	184	183	139	100	12	92	90	124	178	84
케냐	136	143	95	151	136	116	122	102	153	137	134
예멘	137	140	68	122	44	185	162	135	134	85	154
감비아	138	159	71	138	113	160	162	180	77	49	102
마살제도	139	70	10	68	189	71	183	128	68	58	168
시에라리온	140	91	120	172	158	151	62	130	133	109	143
우즈베키스탄	141	65	149	145	143	104	100	118	189	28	77
인도	142	158	184	137	121	36	7	156	126	186	137
가자지구	143	162	173	83	99	116	141	51	130	105	189
가봉	144	135	76	129	181	104	146	154	135	156	125
마이크로네시아	145	151	37	30	189	61	186	114	106	162	118

* 자료원 : World Bank Group

- 모디 정부는 정부지출 확대와 강력한 개혁정책을 통해 인도를 글로벌 제조허브로 육성하고, 인프라 및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새해 예산안에 이같은 모디 정부의 계획이 잘 반영되어 있음.

[모디 정부 개혁 핵심 내용]

구분	내용
경제 살리기	작은 정부, 재정지출 축소, 공기업 지분매각, 조세행정 투명화
인프라 개선	(도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 2.5배 확대 (철도) FDI 한도 상향조정 검토 (스마트 시티) 최첨단 기술 적용 스마트 시티, 100여개 건설
보건·교육·수자원 개선	적정수준의 기능인력 배양 / 갠지스강을 화물운송의 요충지로 활용, 수질개선 및 개발 추진
정책 안정성 및 일관성 유지	과거 세금 추징 행태를 '테러리즘'이라 규정 및 조세구조 개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징세
방산, 보험, 연금	방산·보험(26%→49%), 연금(0%→49%)로 외국인투자지분 확대
Make in India 캠페인 (경제산업 혁신 및 규제철폐)	제조업 비중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15%에서 '22년까지 25%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 자동차·화학·정보통신기술(IT)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25개 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육성책 마련

□ 인도 변화에 대한 리더들의 평가

-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에 대해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 글로벌기업 CEO들은 긍정적 평가를 보이고 있음.

[모디 정부의 개혁에 대한 평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모디 총리가 취임 이후 보여준 열정과 결단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 Mint (14.10.01)

“일본과 인도 양국관계의 잠재력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

- Business Today (14.09.01)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세계의 공장(중국)과 백오피스(인도)가 결합하면 가장 경쟁력 있는 생산기지과 매력적인 소비 시장이 만들어 질 것”

- Times of India (14.09.17)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인도는 성숙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나라”



잭 웰치, General Electric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제조국가 중 하나가 될 것”



켄이치 아유카와, 마루티 스즈키

“인도는 세계의 기술 중심지로 변화해 왔다”



크레이그 베렛, 인텔

- 모디 총리는 취임 이후,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및 지역 안보에 대해 논의하고, 서남아시아 국가 정상들과도 회담을 갖는 등 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음.

‘재부상하는 인도’
2015~16 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 분석



II

2015~16 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

- 1. 예산안 개요
- 2. 부문별 주요 내용
- 3. 새해 예산안에 대한 우리기업 반응

1

예산안 개요

□ 인도 정부, 성장에 초점 맞춘 2015~1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신정부는 지난 2월말 8% 이상의 경제성장률 달성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발표
 - *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2014-15년도 회계연도에 달성한 7.4%에서 소폭 상승한 8.0~8.5% 설정
- 이번 예산안은 국내 제조업 부흥을 통한 고용창출, 인프라 개발 투자 확대, 비즈니스 확대 개선, 외국인 투자 확대, 조세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하며, 모디 정부는 ‘Make in India’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015~16년 예산 총괄표]

(단위: 천만 루피)

구 분	2014~15(A)	2015~16(B)	증감(B-A)
경상수입	1,126,294	1,141,575	15,281
조세수입	908,463	919,842	11,379
비조세수입	217,831	221,733	3,902
자본수입	554,864	635,902	81,038
융자회수	10,886	10,753	-133
기타수입	31,350	69,500	38,150
차입/기타부채*	512,628	555,649	43,021
총수입	1,681,158	1,777,477	96,319
비계획지출	1,213,224	1,312,200	98,976
계획지출	467,934	465,277	-2,657
총지출	1,681,158	1,777,477	96,319
재정적자*	512,628	555,649	43,021

* 재정적자(차입금)=총지출-(세금+대출회수+기타수입)

* 자료원 : 인도재무부

[부문별 지출 계획]

(단위: 천만 루피, %)

부문	2014/15	2015/16	2016/17	비중(%)
농업 및 관련 산업	17,788	10,199	11,657	2.02
농촌 개발	51,757	1,877	3,131	0.54
관개 및 홍수통제	441	896	772	0.13
에너지	182,388	154,878	167,341	28.93
산업 및 광물	33,433	39,397	43,113	7.45
교통	103,959	106,242	193,417	33.44
통신	16,209	13,027	12,032	2.08
과학기술 및 환경	13,535	14,821	19,023	3.29
일반경제서비스	26,064	17,303	20,333	3.52
사회서비스	150,736	64,284	81,003	14.01
일반서비스	7,263	3,887	26,559	4.59
총액	603,573	426,811	478,382	

* 자료원 : 인도재무부

- 모디 정부는 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 인하,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상품 및 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 도입, 관세 인하 등의 조치를 단행할 계획임.
- 부문별 지출에서는 에너지, 교통 부문이 각각 전체 지출의 28.93%, 3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 부문도 14.01%를 차지, 정부 지출 계획이 인프라 개선과 사회복지에 집중되어 있음.

□ 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보편적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 이번 예산안에는 모디 정부의 성장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받는 농민들과 소외계층을 포용하기 위해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확대 계획도 포함되었으며, 모디 정부는 각종 보장보험 혜택 범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빈곤층을 지원하고, 전국민 대상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임.
 - The Pradhan Mantir Suraksha Bima Yojanafmf 통해 월 1루피, 12년 보장, 사망금 20만 루피 제공
 - The Atal Pension Yojana를 통해 연 최고 1천 루피, 5년 보장,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부담

- 자연재해사망위험 보장, 18~50세 가입대상, 연 330루피, 사망 시 20만 루피 제공
- 토지법 개혁으로 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모디 정부는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농업 부문 지출 확대 계획도 발표
 - 시골인프라개발펀드(RIDF), 장기신용펀드, 단기신용협력융자재금융펀드를 창설하여, 농업 부문 지출을 통한 생산성 제고, 각종 펀드 활용한 신용융자를 확대할 계획
- 인도 경제 성장 견인의 메커니즘으로 ‘Make in India’ 를 강조하는 동시에, ‘Skill India’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 예정
 - Make in India 정책 : 각종 간접세 통합 세율 단순화, 물품세 (CENVAT) 공제원활화,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제도 확대, 별과금조항 합리화, 인도 현지생산 장려위한 관세율 조정 등
 - Skill India 정책 : 인력 양성 및 기술교육 확대, 농촌 청년의 취업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인도공대(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인도 의학연구소(All India Institutes of Medical Sciences), 인도경영대학원(Indian Institute of Management) 신설, 연구 및 교육 분야 대학원과 의약품 연구소 설립

[모디 정부의 개혁안과 주요 조치]

① 모든 인도국민을 위한 사회보장혜택 (Social Security for all Indians)

- Arun Jaitley 재무부장관은 Atal Pension Yojana 및 Universal Social Security 등 저비용 구조의 사회보장 계획을 발표. 동 계획은 특히 그동안 인도 내에서 사회보장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빈곤층 등 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 금번 사회보장 계획은 인도 소외계층들도 혜택 받을 수 있는 최초의 예산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②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인하 (Lower Taxes on business)

- 모디 정부는 현재 30%에 육박하는 법인세율을 향후 4년간 점차적으로 25%까지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인도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인도의 법인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인도 진출 기업들은 수익 대비 높은 금액을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음.

③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증가 (Higher taxes on the rich)

- 모디 정부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소득 1,000만 루피(\$16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2% 추가 징수 계획을 발표

④ 세금납부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Real Penalties for tax cheats)

- 인도 내 노동인구는 약 8억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가운데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 인구는 3,500만명에 불과 (중국은 납세자 인구 3억명)
- 인도 정부는 재정강화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세금 부정행위 및 해외유출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

⑤ 인프라 투자 확대 (More Spending on infrastructure)

- 열악한 인도 내 인프라 재건을 위해 7,000억 루피(113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
- 가장 많이 예산이 배정된 부분은 철도시설 개선이며, 동 예산안은 금번 2015~2016 회계연도 예산안 가운데 가장 국민들이 환영하는 예산으로 평가

⑥ 상품 및 서비스세 (Goods and Services Tax : GST)

- 모디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s Tax)를 2016년 4월부터 실행하여 역내 교역을 촉진시키고 물류비용을 표준화
- 인도 각 주의 세제 시스템은 매우 상이하며 인도 내에서 타 주로 교역하는 것은 해외로 수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모디 정부의 예산안과 추진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기까지 적지 않은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디 정부는 의회 내에서 모디 총리의 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에 있는 상원을 가장 먼저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 모디 총리가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상원은 야당이 지배

- 그러나 전반적으로 유가하락 등 글로벌경제가 호전적이고, 국내경기도 물가안정과 금리 하락 등 모디 총리가 개혁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좋은 여건이므로, 모디 총리의 예산안과 정책 추진은 순항할 것으로 예상

[새해 예산안 산업별 영향분석]

산업 부문	예산안 내용	전문가 및 업계 평가	기상도 (0-5점)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까지 농업 생산량 증대와 농업 생산물의 최적 가격 달성 목표 - 관개사업과 수역 개발 지원에 530억 루피 예산 할당 - 2015-16년 농촌 인프라 개발 펀드 조성에 2,500억 루피 예산 할당 - 장기 Rural Credit Fund 조성에 1,500억 예산 할당 - 단기 Co-operative Rural Credit Refinance Fund 조성에 4,500억 루피 예산 할당 - 단기 RRB Refinance Fund 조성에 1,500억 루피 예산 할당 - 2015-16년 사이에 총 8조 5천억 규모의 agricultural credit 마련 목표 -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행하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MGNREGA에 3469억9000만 루피 예산 할당 - 외부와 단절되어 있는 178,000여명의 주민들을 전천후 도로로 연결 - Unified National Agriculture Market 건설 목표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분야 강조는 사회복지를 실현하고 평등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할 것 - 보조금 지급 개선을 통해 구조적인 누출(systemic leakage)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빈곤층을 돕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충족할 것으로 예상 - 신용 자금 조성과 농촌 인프라 구축, 토양 회복과 같은 장기 전략은 매우 긍정적 - 농부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농업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품 가격 안정화 정책이 아직까지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음 	 (4점)
방위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등 방위 장비의 인도 내 자급 자족 비율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Make in India 정책 시행 - 2015-16년 총 예산 규모 중 방위 장비 구입을 위해 2조4672억7000만 루피 예산 할당 - 주요수입품은 항공기, 항공엔진, 중대형화물차, 철도차량 등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위산업부분 예산규모 10.95% 확대 - 수입을 축소하고 인도 내 자급자족 비율 확대를 위해 관련 산업기반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 - 국내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 - 안보분야 민간부분 비중을 확대하는 새로운 정부조달정책 발표 기대 	 (4점)

<p>전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000MW 규모의 전력 발전소 5개 신규 설립 - 승인절차간소화를 위한 단일창구설립 위한 전문가위원회구성 - 2020년까지 인도내 낙후된 2만개의 농촌지역에 전기 공급(Electrification) - 신규 발전소 설립과 송배전관련 기계설비 구축시 20%추가 감가상각 혜택 제공 - 석탄(Coal), 갈탄(lignite), 토탄(peat)에 부과되는 클린에너지세를 톤당 100 루피에서 200루피로 증가 - Pig iron과 Ferro Silicon-magnesium에 대한 소비세(Excise duty) 면제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프로젝트들이 신규 자본 확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000억루피 규모의 인프라 펀드 조성은 전력 분야 성장에 긍정적 	 <p>(4점)</p>
<p>에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용량을 175,000MW 규모로 확대 목표(태양열 100,000MW, 풍력 60,000MW, 바이오매스 10,000MW, 소형수력 5,000MW) - Round copper wire와 tin alloys에 부과되는 소비세 면제 - RPS 변환장치 제조에 사용되는 AEC(Active Energy Controller)에 5%의 관세율 부과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와 태양열에너지 강조는 전력 생산에 긍정적 - 에너지 분야는 향후 인도경제 성장건인에 중요한역할 할 것 - Round copper wire와 tin alloy에 대한 소비세 면제 긍정적 	 <p>(4점)</p>
<p>제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회복과 투자회복, 국내 제조업 장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 category I 분야와 II(대체 투자 펀드) 모두에 면세 혜택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하기 좋은 활동 조성, Make in India 시행,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2016. 4. 1일부터 도입되는 GST는 산업경제를 활성화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조세회피방지법안 2년 유예, 부유세 폐지, FMC와 SEBI 통합, 30%에서 25%로 법인세 인하 등은 Make in India 캠페인 시행에 긍정적 영향 	 <p>(5점)</p>
<p>정보 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은 기술과 관련 있으므로 인도 내 IT 산업 성장 기회가 매우 큼 - 인도 재무장관은 인도 내 태블릿 제조업체에게 큰 희소식인 IT 제품에 대한 특별추가관세 폐지를 발표 - 이번 예산안에는 조세회피 방지원칙 2년 연기, 인도내 운송비용 한계선을 5000만루피에서 2억루피로 인상, 4년간 법인세를 30%에서 25%로 인하, 특정 산업 면세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됨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예산안은 혁신적이며 인도의 ICT 하드웨어 산업 등의 성장 중심 전략으로 긍정적 평가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젤펀딩에 대한 세금 철폐를 수없이 요구해도 언급조차 없었음. 해당 산업은 상품에 대해 서비스와 판매 세금이 이중으로 과세될 것임. 그러나 그 또한 예산안에 언급되지 않음. 비록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MAT에 대한 언급이 없음 	 <p>(3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시티를 넘어선 스 이상의 스마트 컨트리: 251억 루피가 Digital India 프로그램과 정보통신 및 전자 산업에 할당됨 - 기업가 양성: IT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를 위한 100억 루피 할당 - 활성화 방안: 기업하기 좋은 환경, e-거버넌스 정책, 인도 태블릿 등의 디지털 기기 제조업체 촉진을 위한 호혜적 세금 정책 변화 	<p>(중립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산업 관점에서 모든 부품에 대한 특별추가관세(Special Additional Duty, SAD)를 철폐하면서 관세 역전 구조가 되어 버림.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와 연방매입 세액공제 불용 시 2%의 특혜 구조는 인도 태블릿 제조업에 긍정적인 발판이 될 것임. 그러나 국내 PC 제조 성장과 수출 진흥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p>의료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리미엄 건강보험 공제 기준이 연간 일반 기준 1만5,000루피에서 2만5,000루피로, 노인 기준 2만루피에서 3만루피로 인상됨 - 미디어 시설 향상을 위해 총인도의료 과학연구원(AIIMS)이 잠무카슈미르주, 편자브주, 타밀나두주, 히마찰프라데시주, 아삼주에 신설될 예정 - 도착 비자 대상국을 150개국으로 확대 - 연간 12루피의 프리미엄으로 2천만 루피 규모의 Pradhan Mantri Suraksha Bima Yojana 사고 보험이 곧 시행될 예정 - 연금 관련 사회안전망 5억 루피 감축 - 법인세 감면 - 서비스세 12.36%에서 14%로 인상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비자 대상국을 150개 국으로 늘려 인도 내 의료 관광을 증진시킬 것 - 정부가 의료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했으며, 의료 부문에서 국민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안에 의료부문 공공기금의 획기적인 확대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제약 부문과 생명과학에 대한 연구 및 개발 확대 방안이 없음. Jaitley 재무장관은 제약, 생명과학 부문 강화를 위한 추진력 제고의 기회를 잃어버렸으며, 이번 예산안은 전체 의료 서비스의 투자 조성을 위한 단기 처방 또한 실패함 	 (2점)
<p>금융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유세 폐지 - 연수입 1천만 루피 이상 '슈퍼리치'에 대한 2% 추가세 - 개인 납세자에 대한 최대 공제액 444,200 루피 - 서비스세 14%로 인상 - CSR과 별도로 Swachh Bharat 기여에 대한 100% 공제 - 월급 생활자에 대한 교통 공제액 월 1,600루피로 인상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예산은 GST 시행, 향후 금융 시장의 발전의 첫 도약이 될 것이며 사회적 함유물을 위한 적절한 행보 - 재무장관은 핵심 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 증대, 투자 사이클의 소생, 블랙 머니의 양성화, 재정적자 완화를 통한 재정 건실화의 실용적 접근 등의 균형 잡힌 예산안을 발표함 	 (2점)

<p>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 보험 보장에 대한 세금 감면 제한 인상 - 일반 사회 안전 제도(사고 및 자연사 보장) - PMSBY & PMJBY 하에 20만 루피 보험 보장 - Sukanya Samridhi 제도 - 교육 및 결혼을 위한 소녀 전용 소액 저축 면세 혜택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예산안은 모든 국민을 위해 건강, 사고, 생명보험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탁월함을 보임 <p>(중립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부문에 즉각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투자가 일어나진 않았으나 매우 긍정적인 전조들이 보임 	 <p>(4점)</p>
<p>통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부문의 수익 최대화는 재정 적자 감소에 긍정적 요인이나, 이미 사정이 좋지 않은 통신사의 경우 부정적 영향이 올 수 있음 - Make in India 촉진에 역점을 둔 정부 시책은 해당 부문에서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임 - 화폐 디지털화와 'JAM' 삼각구조 (Jan Dhan, Aadhaar, 모바일 접속)는 무통화 거래 촉진과 디지털 화폐 사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 서비스세 인상(12%→15%)은 모바일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갈 것이며 단말기, 핸드프리 기기, 메모리카드 등은 제안된 세금 구조 합리화로 비용이 상승할 것임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신 부문에 대한 예산안에서 Jan Dhan programme, Aadhaar, 이동전화서비스업의 결합으로 밝은 전망이 예상 - 이동전화서비스의 역할이 금융과 결합하는 힘찬 도약이 될 것이며, 무화폐 거래가 활성화될 것. 이는 모바일 결제 시스템 이용을 촉진시킬 전망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예산안의 몇몇 정책들은 통신 산업을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산업의 주요 관심과 목표들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p>(2점)</p>
<p>전자상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세가 12.36%에서 14%로 증가 - 기술 서비스 사용료가 25%에서 10%로 감소 - 신생기업들의 기술 발전을 위한 100억 루피 상당의 '스타트업 펀드' 조성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소비세(GST) 발효 촉진에 대한 확약은 인도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세금 부담을 갑자기 늘리면 캐시버닝을 증가시킴으로써 효율을 떨어뜨릴 것 - 세금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여 소비자 비용 부담이 늘면서 결국 서비스를 외면하게 될 것 <p>(중립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전자상거래 관련 예산안은 주로 평범했다는 의견 	 <p>(3점)</p>
<p>부동산 & 인프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00억루피의 비용이 드는 도로건설은 건설 회사들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 - 부동산 투자 신탁에 대한 세금 경감은 부동산 산업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km 도로 증축으로 인한 도로 및 철도 인프라 확충을 가속화할 것. 이는 상품을 더 빠르게 이동시킴으로써 수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km에 육박하는 도로 인프라 확충 - 인프라 투자에 7000억 루피 조성 필요 - 정부는 도로, 항만, 철도, 공항과 같은 다른 인프라 프로젝트와 유사한 플러그-앤드-플레이 프로젝트를 검토할 예정 	<p>능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증축은 철강, 역청, 시멘트 수요를 증가시킬 것임.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지님 - 투자 촉진 및 신규 도로건설 프로젝트 발주에 동기부여하여 건설장비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 - PPP모델에 활기를 되찾아 줄 것임 - 부유세 철폐로 인해 장기간 투자로 매년 부담해야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된 중산층과 투자금액이 큰 개인고객들로부터의 투자가 활발해 질 것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으나 약속된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견 - 서비스세 인상은 주택 구입자들의 구매력에 영향을 끼칠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 	 (3.5점)
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채권, 도로 및 관개에 면세조치 - 철로, 전차 선로 건설에 사용되는 레일 원재료에 부과되는 소비세가 2012.3.17일부터 2014.2.2일까지 연방 매입 세액 공제 불용 시 면제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 및 도로 프로젝트를 위한 면세 인프라 채권은 인프라와 철도 투자를 이끌어 낼 것이고 이는 주식에 반영 될 것임 	 (4점)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품소비세는 2016.4.1일 시행될 예정 - 전기자동차 제조와 상용화를 가속화 하기 위해 이번 예산안에 7억5000만 루피 할당 -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물품세 감면 - 수입 상용차에 대한 실효 관세율 10%에서 20%로 인상 - 정부는 이전의 30%였던 통합세를 2016년부터 25%로 인하하기로 결정 - 이전의 10%였던 기본 관세가 40%로 증가 	<p>(긍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지방도시의 고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 <p>(부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예산안에 인도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없다는 실망스러운 의견도 있음 <p>(중립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세의 인상은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조치들로 인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3.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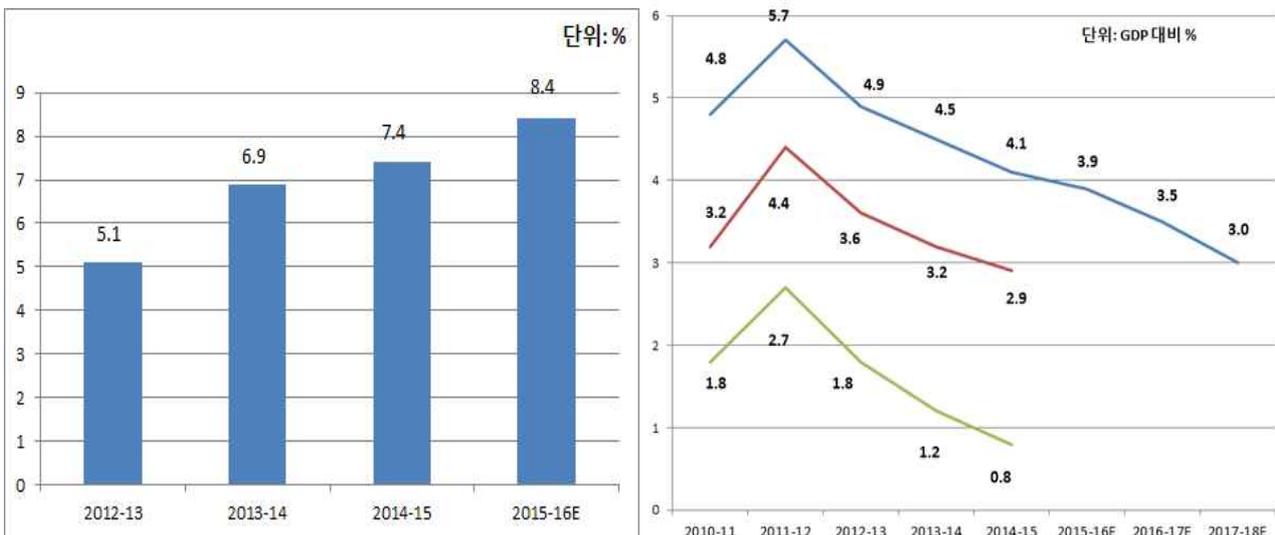
2 부문별 주요 내용

1 경기부양책

□ 경기부양과 재정건전화 동시에 실현

- 아룬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2015년 재정적자 수준을 기존 목표인 GDP의 3.6%에서 GDP의 3.9%로 완화하고, 기존에 수립했던 재정 적자 3.0% 목표는 '16년 회계연도에서 '17년 회계연도로 1년 연기한다고 발표
 - 이는 올해 경기부양에 집중하기 위해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인프라투자 등 핵심부문 지출을 확대하고 사회보장 프로그램 확대(보험 등)를 위한 것임.
 - 재정적자 건전화 실현 가능성은 향후 경기활성화 여부, 국제 유가 하락세 지속 여부, 공기업 주식 매각 성과 등에 달려있으며 현재로서는 경기회복 기대감 증가로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임.
 - 인도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방안으로 공기업 주식매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회복세를 볼 때 목표 달성 가능성이 높음.

[경제성장률 및 재정적자 추이]



- 인도 정부는 도입이 지연되었던 상품 및 서비스세 (Goods and Services Tax : GST) 를 2016년 4월 1일부로 도입하여 조세 행정을 합리화 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수를 확충할 계획임.
 - GST는 이제까지 29개 주로 각각 다른 간접세제로 복잡하였던 인도 간접세제를 단순화하여 공통시장이 되는 것을 촉진하고 연쇄적인 세부담을 줄임으로써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음.
 - 모디 정부는 GST 도입을 염두해 서비스세와 교육세를 12.36%에서 14%로 인상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실시해 왔음.

- 정부는 중앙정부의 물품세(Central excise duty)에 대한 구체적인 세율을 명시하고, 소득세와 서비스 세액 계산 시 전자송장과 전자 거래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객관적이고 안정적인 세수를 확충할 계획임.
 - 국세 행정 개혁 위원회(Tax Administration Reform Commision:TARC)을 통해 세금 관련 정책 사항을 안정적으로 추진 예정

- 또한 정부는 검은돈(Black money) 근절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여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할 계획이며, 탈세를 위해 외국에 자산을 숨기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년형에 처하고 불복종시 300%의 벌금을 부과, 무신고 또는 부적절한 세무신고 시 최장 7년형 금고형 등 강력한 법안 시행 및 특별조사팀을 확대할 계획임.
 - 부동산거래에서 수반하는 블랙머니를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거래 합계액이 2만 루피 이상은 현금지불을 불허하며, 지불인 계좌발행 수표나 전자거래방식은 은행계좌 이체로 해야 함.
 - * 현금거래를 억제, 신용카드/현금카드 거래 장려조치(블랙머니대책 일환)
 - 국내 블랙머니 억제 위해 새로운 배나미거래금지법안 (New Benami Transactions Prohibition Bill)을 이번 예산회기 때 제출예정

2 | 기업 경영환경 개선

□ 인도 정부,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총력

- 인도 정부는 인도 내 열악한 인프라, 높은 유통 비용, 공장건설 애로, 불합리한 세무 및 관세제도, 통관상 애로, 법률 및 노무 리스크 등 기업경영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단행 예정
 - * 기업경영환경 순위: 2014년 142위(전체 189개국 중) → 2016년 50위 목표
- 특히 인도 진출기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토지 획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디 총리는 토지법 조례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Arun Jaitley 인도 재무장관은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몇가지 조치를 발표하며, 신속한 규제 허가를 위한 입법 초안을 준비하는 전문위원회 설립계획을 밝힘.
 - Jaitley 재무장관은 투자자들이 허가를 받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다고 언급하며, 인도 정부는 최근 사업 촉진을 위해 14여개의 규제 허가를 통합한 e-biz포털을 출시했다고 밝힘.
 - 인도 정부는 e-biz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소비세 및 서비스세 등록이 가능하며 디지털 세금 청구서를 발행하고 온라인상에서 과세 내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법인세 및 공제혜택 확대]

- 정부는 법인세를 현 30%에서 추후 4년간 25%로 인하 예정이며, 특정 산업에 한해 적용되던 법인세 면제혜택을 2017년부터 폐지하여 투자 촉진을 도모할 계획임.
- 인도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은 전체 수익 대비 61.7%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남아시아(39.7%), OECD국가(41.3%)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임.

[인도, 남아시아, OECD국가의 기업 부담 세율 비교]

항 목	뭄바이	남아시아	OECD국가
Profit tax (%)	25.3	17.9	16.4
Labor tax and contributions (%)	20.7	8.7	23.0
Other taxes (%)	15.7	13.1	1.9
Total tax rate (% profit)	61.7	39.7	41.3

[인도 기업이 부담하는 세율 항목]

Tax or mandatory contribution	Time (hours)	Statutory tax rate	Tax base	Total tax rate (% profit)	Notes on TTR
Corporate income tax	45	30%	taxable profit	21.24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93	13.61%	gross salaries	15.35	
Central Sales Tax	105	2%	purchase price	14.14	
Employee's state insurance contributions		4.75%	gross salaries	5.36	
Dividend tax		16.995%	dividend distributions	4.04	
Property tax		10%	assessed value	1.32	
Tax on insurance contracts		12% (1+2% Education cess + 1% Secondary & High education cess)	insurance premium	0.26	
Vehicle tax (pollution tax)		INR 200	fixed fee per vehicle	0.01	
Tax on interest		10%	interest income	0.00	included in other taxes
Fuel tax			fuel consumption	0.00	small amount
State VAT		12.5%	value added	0.00	not included
CENVAT (Excise Duty)		12% (1+2% Education cess + 1% Secondary & High education cess)	value added	0.00	not included
Income surcharge		10%	on applicable federal taxes	0.00	included in other taxes
Education cess		2%	all federal taxes including the surcharge	0.00	included in other taxes
Secondary & Higher education cess		1%	all federal taxes including the surcharge	0.00	withheld
Employee paid –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12% + 1.75%	gross salaries	0.00	
Totals:	243.0			61.72	

* 자료원 : World Bank Group

- 2016년 4월 1일부로 GST(상품서비스연방세)를 시행하여 기존에 소비세 및 서비스세로 분리되었던 간접세 체계를 통합할 예정이며, 이같은 조치는 기업의 조세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인도는 세율 자체도 높은 편이지만, 조세시스템이 까다로워 전반적으로 기업경영환경이 매우 열악한 편임.

[인도, 남아시아, OECD국가의 기업경영여건 비교]

항 목		몰바이	남아시아	OECD국가
Starting a Business	Procedures (number)	13.0	7.9	4.8
	Time (days)	30.0	16.0	9.2
	Cost (% income per capita)	16.3	14.6	3.4
	Paid-in min. capital (% of income per capita)	111.2	14.2	8.8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Procedures (number)	27.0	14.0	11.9
	Time (days)	162.0	196.6	149.5
	Cost (% of warehouse value)	46.1	12.8	1.7
Getting Electricity	Procedures (number)	7.0	5.9	4.7
	Time (days)	67.0	145.7	76.8
	Cost (% income per capita)	84.0	1,536.2	73.2
Registering Property	Procedures (number)	7.0	6.4	4.7
	Time (days)	47.0	99.5	24.0
	Cost (% property value)	7.0	7.2	4.2
Getting Credit	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0-12)	6	5	6
	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0-8)	7	3	7
	Credit registry coverage (% of adults)	0.0	3.2	12.1
	Credit bureau coverage (% of adults)	22.4	11.3	67.0
Trading Across Borders	Documents to export (number)	7	8	4
	Time to export (days)	16.0	33.4	10.5
	Cost to export (US\$ per container)	1,120.0	1,922.9	1,080.3
	Cost to export (deflated US\$ per container)	1,120.0	1,922.9	1,080.3
	Documents to import (number)	10	9	4
	Time to import (days)	20.0	34.4	9.6
	Cost to import (US\$ per container)	1,250.0	2,117.8	1,100.4
Cost in import (deflated US\$ per container)	1,250.0	2,117.8	1,100.4	
Enforcing Contracts	Time (days)	1,420.0	1,076.9	539.5
	Cost (% of claim)	39.6	30.4	21.4
	Procedures (number)	46.0	43.3	31.5

* 자료원 : World Bank Group

- 한편 법인세 인하조치에 대한 인도기업들의 반응은 다소 부정적인데, 인도 정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추가요금(surcharge) 기존 요율을 2%p 인상하기로 하면서, 1,000만 루피 이상 매출 기업들의 세부담이 증가되었기 때문임.
- 매출 1억루피 이상인 기업은 2014/15 회계연도 기준 33.99%에서 2015/16 회계연도 34.6%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서비스세가 1.5% 인상되어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

	기존 요율	변경 요율
매출 1억 루피 이상	10%	12%
매출 1000만 루피 이상	5%	7%

- 이밖에도 인도 정부는 기업이 신규 인력 채용시, 신규인력 급여에 대한 법인세 공제혜택을 과거 100명 이상에서 50인 이상 채용시로 확대하고, 청정 기술 운송 수단(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생산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파산법 개정]

- 인도 정부는 파산법을 개정하여 프로젝트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투자자들이 용이하게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
- 현재 산업금융재건위원회 (BIFR, Board for Industrial and Financial Reconstruction)와 부실제조기업법(SICA, Sick Industrial Companies Act)에서 부실기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파산법을 개정할 계획

3 | 외국인 투자 확대

□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및 관세 인하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 모디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 외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관세율을 인하하고, 외국인의 대체투자펀드(Alternate Investment Funds: AIF) 투자를 허용하는 등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주력
 - 기술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소득세와 기술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25%에서 10%로 인하
 - 원자재, 중간재, 부품 등 22개 품목에 대해 기본 세율 인하
 - ITA 분야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일부 회로판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에 대해 특별부가관세(SAD) 면제
 - 일부 원자재 수입 품목에 대해 특별부가관세(SAD) 인하
 - 6개월 이내 신규 공장을 설립하고 기계 설비를 확충할 경우 총비용의 50%에 대해 추가적인 2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바로 다음해에 전력 공급 허용
- 모디 정부는 포트폴리오 투자와 직접투자 유형 간 외국인 투자의 상한 차이를 없애고 전체를 합해 상한을 두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포괄적 조세회피방지법안(General Anti Avoidance Rule: GAAR)은 2년간 연기 하여 2017년 1월 4일 이후에 시행 예정임.

4 | 조세제도 개혁

□ 조세제도 개혁을 통한 재정건전화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 도모

- 모디 정부는 직접세제와 간접세제 모두 대대적으로 개정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기업의 조세 납부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갈 계획임.

□ 직접세제 개정안*1)

<p>① 간접 주식양수도 -개정안</p>	<p>(신고의무) ○ 인도회사는 주식소유 구조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해외 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p> <p>(벌과금) ○ 상기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아래의 벌과금 부과 - 인도회사에 대한 경영권 또는 통제권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해외 주식양수도 거래의 경우, 당해 양수도 거래액의 2% - 그 밖의 경우 10만 루피</p>
<p>② 법인세</p>	<p>○ 사용일수 180일 미만 자산에 대한 추가 감가상각 - 현 소득세법 하에서 200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매입, 설치된 공장, 기계 설비를 대상으로 추가 감가상각(20%)이 허용되었으나, 사용일수 180일 미만인 자산의 경우, 사용한도는 50%로 정해져 있었음 (실질적인 추가 감가상각은 10%만 적용) - 사용일수 180일 미만인 자산의 경우 적용되었던 감가상각 사용 한도 규정이 폐지 (사용일수 180일 이상 자산과 마찬가지로 추가 감가상각 20% 적용 가능) - 2015/16 회계연도 이후 적용 제안</p> <p>(특별 추가공제안) ○ Andhra Pradesh 및 Telangana 주내 후미지역* 투자에 대한 특별 세제혜택 제안 - 아래의 경우, 신규 투자금에 대해 추가 15% 소득공제 (기존 15% →30%) 및 신규 취득/설치된 공장,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 (기존 20%→30%) · 제조공장 설립 · 2015년 4월~2016년 3월 기간동안 신규 자산의 취득 또는 설치 시 * 후미지역(backward area)은 2015년 4월 이후 별도 고시 예정</p> <p>○ In-house R&D 설비에 대한 200% 감가상각 - 신규 취득/설치된 공장,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 (기존 20%→30%)</p>
<p>③ 이전 가격</p>	<p>○ 특정국내거래(Specified Domestic Transactions) - SDT threshold 인상 (5000만 루피 → 2억 루피) - 2015/16 회계연도 기중에 시행 예정</p>
<p>④ 일몰규정 연장</p>	<p>○ 소득세법 Sec 194LD (외국투자자 및 특정 적격투자자에 대한 지급이자) - 현재 원천세율 5% 적용 - 2017년 6월말까지 혜택 연장</p>

1) 직접세제 개정안 내용은 딜로이트 발표자료(인도 세제 개정안)에서 발췌

□ 간접세제 개정안2)

<p>① 공통 변경 내용 (Excise & Service tax 모두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과금 규정 간소화 (과세 징송 조속 해결 및 준법견인 목적) ○ 사전예규 (Advance ruling) 대상 확대 (extended to Resident firm viz LLP, LLP which has no company as its partner, sole proprietorship and one person company) ○ 사업자 등록 간소화 (Central Excise, Service Tax reg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절차 간소화, 문서화 내용 축소, 처리기한 규정 - 2일 (working day) 이내에 등록처리 완료 (single premise registration to be granted within two working days) ○ 전자서명 인보이스, 전자문서 제출 인정 		
<p>② 관세 (Customs Du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관세율은 유지 (10%) - Counter Veiling Duty(CVD) 인상 (12% → 12.5%) - 실효관세율은 인상됨 (28.85% → 29.44%) - 관세역전현상(“Duty Inversion”,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완성품보다 높은 문제) 개선을 위해 특정 제품의 관세율 인하 - 중앙정부 매입세액공제(CENVAT credit) 누적 문제 해결을 위해 Special Additional Duty(SAD) 인하 - LCD/LED TV panel 및 Table PC 등의 부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면제 또는 인하 - 상업용 차량(CKD 형태 제외)에 대한 실효 기본관세율 인상 (10%→20%) - 전기 자동차 및 Hybrid 자동차에 대한 양허세율, 2016.3월말까지로 연장 		
<p>[주요 품목별 관세율]</p> <p>○ 관세역전 현상 개선을 위해 아래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p>			
<p>Product Rate of Duty (in %)</p>			
Imported goods	When used for manufacture of	up to 28 February 2015	From 1 March 2015
Sulphuric Acid	Fertilizer	BCD: 7.5%	BCD: 5%
C-Block, Over Load Protector (OLP) & Positive Thermal co-efficient and Crank Shaft	Compressor	BCD: 7.5%	BCD: 5%
Water Blocking Tape, Ethylene-propylene-non-conjugated diene rubber (EPDM) and Mica glass tape (*)	Insulated wires and cables	BCD: 10%	BCD: 7.5%
Magnetron (up to 1 KW)	Domestic microwave	BCD: 5%	BCD: Nil%
Metal Parts (*)	Electrical Insulators	BCD: 10%	BCD: 7.5%
<p>(*) subject to actual user condition</p>			

2) 간접세제 개정안 내용은 딜로이트 발표자료(인도 세제 개정안)에서 발췌

- 원자재비용 저감을 지원("Make-in India")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Product		Rate of Duty (in %)	
Imported goods	When used for manufacture of	up to 28 February 2015	From 1 March 2015
HDPE	Telecommunication grade optical fiber cables	BCD: 7.5%	BCD: Nil%
Black Light Unit Module (*)	LCD / LED TV Panel	BCD: 10%	BCD: Nil%
Parts, components and accessories (*)	Tablets and its sub-parts	CVD: 12% SAD: 4%	BCD: Nil% CVD: Nil% SAD: Nil%
Evacuated tubes with three layers of solar selective coating (*)	Solar water heater and system	BCD: 7.5%	BCD: Nil%
Specified components of CNC lathe machine and machining center (*)	CNC lathe machine	BCD: 7.5%	BCD: 2.5%
Active Energy Controller (AEC)	Renewable Power System Invertor	BCD: 7.5%	BCD: 5%

(*) subject to actual user condition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

Product		Rate of Duty (in %)	
Imported goods		up to 28 February 2015	From 1 March 2015
Organic LED		BCD: 10%	BCD: Nil%
Styrene, ethylene dichloride (EDC) and Vinyl Chloride Monomer (VCM)		BCD: 2.5%	BCD: 2%
Isoprene and liquefied butanes		BCD: 5%	BCD: 2.5%
Ulexite ore		BCD: 2.5%	BCD: Nil%
Butyl acrylate		BCD: 7.5%	BCD: 5%

- 관세율 인상 품목

Product		Rate of Duty (in %)	
Imported goods		up to 28 February 2015	From 1 March 2015
Metallurgical coke		BCD: 2.5%	BCD: 5%
Commercial Vehicles (other than in CKD form)		BCD: 10%	BCD: 20%
Road Cess on Petrol		₹ 2 per liter	₹ 6 per liter

○ CENVAT credit 누적 문제 해결을 위해 Special Additional Duty(SAD)가 인화된 대상 품목

Product	Rate of Duty (in %)	
	up to 28 February 2015	From 1 March 2015
Imported goods		
All goods except populated PCBs for use in manufacture of ITA bound goods	SAD: 4%	SAD: Nil%
Naphtha	SAD: 4%	SAD: 2%
Styrene, ethylene dichloride (EDC) and Vinyl Chloride Monomer (VCM)	SAD: 4%	SAD: 2%
Melting scrap of iron or steel, stainless steel scrap for the purpose of melting, copper scrap, brass scrap and aluminium scrap	SAD: 4%	SAD: 2%
All inpu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LED driver and MCPCB for LED lights and Fixtures & LED Lamps (*)	SAD: 4%	SAD: Nil%

<p>③ 제조세 (Excise Duty)</p>	<p>○ 핵심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인상 12% → 12.5% - 특정 완제품에 대한 세율 인하 - 특정 제품의 부품에 대한 세율 인하 - 특정 제품에 대한 제조세 과표 기준을 거래 기준(Ex-factory)에서 소매 가격(Retail Sale Price, "RSP")으로 변경(농축 우유, 차 액기스 등) - CENVAT credit 사용 여부에 따라 세율 선택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 세율 인상
-----------------------------------	--

[주요 품목별 제조세율]

Product	Basic Excise Duty(in %)	
	up to 28 February 2015	From 1 March 2015
Wafer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integrated circuit (IC) modules for smart cards	12%	6%
Input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LED drivers and MCPCB for LED lights, fixtures and LED lamps	12%	6%
Chassis of Ambulances	24%	12.5%

Description of Goods	Basic Excise Duty(in %)	
	up to 28 February 2015	From 1 March 2015
All goods, manufactured and cleared in packaged form		
• From a mini cement plant	6% + ₹ 120/- PMT	6% + ₹ 125/- PMT
• Other than from a mini cement plant	12% + ₹ 120/- PMT	12.5% + ₹ 125/- PMT
Sacks and bags of polymers of ethylene other than for industrial use	12%	15%

CENVAT credit 사용 여부에 따라 세율 선택가능 품목 (2015년 3월 1일부 시행)	Basic Excise Duty(in %)	
	Cenvat Credit 사용시	Cenvat Credit 불용시
Solar water heater and system	12.5%	NIL
Mobiles handsets, including cellular phones	6% → 12.5%	1%*
Tablet computers	12.5%	2%

당분 또는 향 함유된 미네랄 워터 및 탄산음료	Duty of Excise (in %)	
	up to 28 February 2015	From 1 March 2015
Basic Excise Duty	12%	18%
Additional Excise Duty	5%	NIL

* Mobile handsets (Cellular Phones 포함)의 CENVAT credit 불용시 적용 제조세율(1%)은 전과 동일

[제조세 면제대상 제품]

Product	Basic Excise Duty(in %)	
	up to 28 February 2015	From 1 March 2015
Specified raw material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pacemakers (심박동조율기 관련 부품)	12%	NIL
Pig iron SG grade and Ferro-silicon-magnesium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cast components of wind operated electricity generators (풍력발전 관련 부품)	12%	NIL
Round copper wire and tin alloys for use in the manufacture of Solar PV ribbon for manufacture of solar PV cells (태양광 관련 부품)	12%	NIL

[제조세 인상 제품]

○ 아래의 담배 제품에 대한 세율 인상

Product	Rate of Duty (in %)	
	up to 28 February 2015	From 1 March 2015
	BED ₹ Per 1000 sticks	BED ₹ Per 1000 sticks
Unfiltered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 of length not exceeding 65 mm	990	1280
• of length exceeding 65 mm but not exceeding 70 mm	1995	2335
Filtered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 of length not exceeding 65 mm	990	1280
• of length exceeding 65 mm but not exceeding 70 mm	1490	1740
• of length exceeding 70 mm but not exceeding 75 mm	1995	2335
• not categorized under specific chapter heading	2875	3375

[Clean Energy Cess]

Product	Rate of Duty (per KG)	
	up to 28 February 2015	From 1 March 2015
Coal, Lignite and pear	₹ 100 Per tonne	₹ Per tonne

* Education cess and the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ess(ESHC)는 면제

<p>④ 서비스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율 인상 (12.36% → 14%) - Swachh Bharat Cess(2%)가 추가 부과 (부과 대상 서비스는 추가 고시) - 특정 대리납부(reverse charge) 서비스의 경우, 부분 대리납부에서 전체 대리납부로 확대 - 특정 서비스의 경우 과표경감율(abatement rate)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서비스의 경우 기존 75%에서 70%로 하향 조정, 2015년 4월 1일 시행 ○ 면제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서비스의 경우, 2015년 4월 1일부로 서비스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또는 항만 관련 건설, 설치, 시운전 등의 서비스 · 정부를 상대로 제공되는 건설, 시설 보수 서비스 (단, 역사유적, 운하, 댐, 파이프라인, 도관 등에 대한 해당 서비스는 그대로 면제 대상) · 뮤추얼 펀드 agent가 fund 또는 자산운용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식품 운송 서비스 (단, 밀가루, 쌀 등의 곡물, 소금, 우유 등은 면제 지속) ○ 면제 대상 리스트 (Negative List)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서비스의 경우, 향후 서비스세 부과 대상으로 변경, 발표일은 추후 고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공원 입장료와 공연 입장료 · 정부 및 지방정부가 사업체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p>⑤ 매입세액공제 (CENVAT Credit Rul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세액공제 사용기한 연장 (인보이스일로부터 기존 6개월→1년) - 무상사급 사업자(Job worker)의 작업장에 자본재가 전달되는 시점에 허용된 매입세액 공제의 취소 조건을 완화 (해당 자본재가 원제 조자(principal)에게 180일을 초과한 시점에 반환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취소되었는데, 해당 기한을 180일에서 2년으로 연장) ○ 아래 사항은 2015년 4월 1일부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 대리납부 의무를 갖는 서비스 수혜자의 매입세액공제 사용 가능 시점을 인보이스 시점으로 변경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잔여 부분납부분을 완료하였을 때 비로소 매입세액공제 사용이 가능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사항은 2015년 5월 1일부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오로 공제하고자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미사용된 매입세액공제분에 대하여 이자 부과 면제 - 그러나 착오에 의한 공제가 완결되었거나, 세액 환급된 경우에는 당해 공제/환급금을 환수하면서 기간이자도 부과
⑥ 통합부가세 (Goods and Services Tax)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음 - 2016년 4월 1일까지 GST 도입하겠다는 의지 재확인 - 서비스세 인상 (12.36% → 14%)은 GST를 위한 과도기적 조치임

5 | 제조업 육성

[제조업 육성 정책 및 예산안에 대한 인도 현지 반응]

- 인도의 주요 제조기업인 Bharat Force의 바바회장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인도를 두자리수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극찬
- 인도 정부가 재정적자비율은 GDP의 4.1% 이내로 유지한 것은 거시경제 측면에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110억 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는 인도의 제조업 비중을 현재 15%에서 향후 25%로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한편 이번 예산안 중, ① 2016년 4월에 시행될 상품종합세(GST) 도입, ② 4,000 MW 용량의 발전소 5기 건설 발표, ③ 델리-뭄바이 산업공단의 본격적 개발 ④ 재생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등을 주요 하이라이트로 언급하면서, 이 부분이 제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함
- 또한 정부의 조세정책 관련, ① 법인세 인하, ② 조세회피방지법안 (General Anti-Avoidance Rule, GAAR) 도입 2년 연기, ③ 조세 소급 적용을 자제하겠다는 원칙 발표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우려를 상당부분 씻어냈다고 평가

□ 기술자금 지원, 인력양성, 관세 인하를 통한 제조업 발전 촉진

- 모디 정부는 중소기업에 기술자금 지원, 직업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방위산업 육성, 관세인하 조치 등을 통해 제조업을 적극 육성할 계획임.

[모디 정부의 제조업 육성 주요 조치]

<p>① AIM (Atal Innovation Mission) 설치</p>	<p>○ NITI(인도 개조 국가기구) 산하에 AIM을 설치 할 계획임. - AIM은 학자, 기업가, 연구개발, 과학조사 등에 혁신촉진 플랫폼을 제공함 - 총 15억 루피의 예산이 배정 될 예정</p>																										
<p>② 직업 교육 강화</p>	<p>- 정부는 National Skill Mission을 통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할 계획 - 현재 노동가능인력중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인구는 5% 미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data-bbox="159 963 782 1579"> <p>[GDP대비 제조업 비중(%)]</p> <table border="1"> <caption>[GDP대비 제조업 비중(%)]</caption> <thead> <tr> <th>국가</th> <th>비중 (%)</th> </tr> </thead> <tbody> <tr> <td>중국</td> <td>32</td> </tr> <tr> <td>인도</td> <td>18</td> </tr> <tr> <td>독일</td> <td>22</td> </tr> <tr> <td>인도네시아</td> <td>24</td> </tr> <tr> <td>한국</td> <td>31</td> </tr> <tr> <td>말레이시아</td> <td>24</td> </tr> </tbody> </table> </div> <div data-bbox="798 963 1436 1579"> <p>[노동집약적 vs 자본집약적 제조업 비중(%)]</p> <table border="1"> <caption>[노동집약적 vs 자본집약적 제조업 비중(%)]</caption> <thead> <tr> <th>연도</th> <th>노동집약적 (%)</th> <th>자본집약적 (%)</th> </tr> </thead> <tbody> <tr> <td>1970년대</td> <td>5.8</td> <td>6.8</td> </tr> <tr> <td>1990년대</td> <td>6.3</td> <td>9.5</td> </tr> <tr> <td>2011-13</td> <td>5.5</td> <td>11.1</td> </tr> </tbody> </table> </div> </div>		국가	비중 (%)	중국	32	인도	18	독일	22	인도네시아	24	한국	31	말레이시아	24	연도	노동집약적 (%)	자본집약적 (%)	1970년대	5.8	6.8	1990년대	6.3	9.5	2011-13	5.5	11.1
국가	비중 (%)																										
중국	32																										
인도	18																										
독일	22																										
인도네시아	24																										
한국	31																										
말레이시아	24																										
연도	노동집약적 (%)	자본집약적 (%)																									
1970년대	5.8	6.8																									
1990년대	6.3	9.5																									
2011-13	5.5	11.1																									
<p>* 자료원 : World Bank, Crisil</p>																											
<p>③ SETU (Self Employment & Talent Utilisation) 설립</p>	<p>○ 주로 기술 주도 산업 부문의 신생기업, 개인창업자 등을 지원, 양성 목적 - 100억 루피의 예산이 배정 될 예정</p>																										
<p>④ MUDRA (Micro Units Development Refinance Agency) 은행설립</p>	<p>- 2천억 루피의 자본금을 보유한 미소대출은행설립을 통해 5,770만 개사에 달하는 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p>																										

<p>⑤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제조업 발전 유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이틀리 재무장관은 자주국방능력 향상을 통해 국내 제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 - 국방예산은 2조2237억루피에서 올해 2조4673억루피로 증액
<p>⑥ 원자재, 중간재와 부품 등 22개 품목에 대한 기본 관세율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일부 산업에서 부품의 관세율은 높고, 완제품의 관세율은 낮은 관세 역전이 발생하여 제조업 발전에 저해요소가 되었던 점을 개선 - 즉, 부품 관세율은 낮추고 완제품 관세율은 높여서 현지 제조를 유도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
<p>⑦ 안드라프라데쉬 및 텔랑가나에 대한 투자 혜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분리되어 산업기반이 열악한 안드라 프라데쉬주(Andhra Pradesh) 및 텔랑가나(Telangana)주 특정 지역에 신규 공장 건설 시, 투자 보조금 제공 (15%) 및 추가 감가상각 인정 (35%) - 2015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한시적으로 적용

□ 관세제도 시정 조치

- 인도 정부는 특정재, 원재료, 중간재, 부품의 기본관세(BCD)/특별추가 관세(SAD)율을 인하함으로써 수입관세가 대상물품세 보다 높은 불합리한 관세제도를 시정 조치할 예정
- IT 관련으로 통지된 품목 제조에 사용된 모든 물품, 반도체 웨이퍼 제작에 사용 되는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SAD는 면제
- * populated PCD 회로기판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수입관세율 변화품목]

- HS 72 및 73류, 철강 및 철강제품 기본관세율 10%에서 15%로 인상
- 통신 그레이드 광섬유, 광섬유 케이블 제작에 사용되는 HDPE 수입 기본관세 면제
- LED조명용 LED드라이버, MCPCB, LED 램프용 보조기구 제작에 투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특별추가관세 면제
- 나프타, 용융 철강스크랩, 용융 스테인레스 스틸스트랩, 구리스크랩, 황동 스크랩에 대한 특별추가관세 4%에서 2%로 인하
- 메가파워프로젝트용으로 수입되는 제품이 기본관세와 특별추가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 제출하는뱅크개런티 제출기간을 종전에는 36개월이었으나 66개월로 연장

- 수입품에 대한 교육세 및 고등교육세는 지속되며, 실효관세율의 중간치는 28.85%에서 29.44%로 인상 조치
- * CVD(상계관세), SAD(특별추가관세)는 상계가능

[관세계산 사례]

	2015년도 세율(%)	
① 수입관세(CIF 가격+ 하역비용)		100.0
② 기본관세 Basic Customs Duty(BCD)	①×세율	10.0
③ 소계	①+②	110.0
④ 상계관세 Counter Vailing Duty(CVD)	③×세율	13.75
⑤ 교육세 Education Cess	(②+④)×세율	0.71
⑥ 소계	③+④+⑤	124.46
⑦ 특별추가관세 Special Additional Duty(SAD)	⑥×세율	4.98
합 계		129.44
관세합계	②+④+⑤+⑦	29.44
* CENVATABLE(상계가능)	④+⑦	18.73

6 | 인프라 투자 확대

- 열악한 인프라 개선 위해 기간 시설(철도, 도로 등)에 대규모 투자
 - 인도 재무장관 Arun Jaitley는 현재의 사회기반시설 수준은 인도의 성장계획에 부합하지 못하다고 언급하면서,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 개발에 7,000억 루피를 증액했다고 밝힘.
 - * 공기업을 통한 공공 부문의 자본 지출액은 약 3조 1,788억 루피 예상
 - 인프라 수요가 증가되고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 등으로 향후 5년간 인도 인프라 시장규모는 연평균 6% 이상 성장하여 2018년 999억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인도 정부는 인프라 금융공사에 연간 2천억 루피의 주식을 출자하여 국가투자인프라펀드 (National Investment & Infrastructure Fund: NIIF) 창설하고, 면세 인프라 채권(Tax free Infrastructure bonds)를 발행하여 철도, 도로 및 관개시설에 투자 예정이며, 투자금 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체투자펀드 투자를 허용
- 도시 개발 계획 및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목표로 100개 스마트도시 건설과 500개 거주지 재개발 등이 포함되었으며, 낙후지역 도시 재건을 위해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주의 비하르(Bihar)와 서벵골(West Bengal)에 특별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
 - * 2015년 1월 4일 ~ 2020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안드라프라데시주와 텔랑가나주 내 지정된 지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할 경우 투자 보조금 제공(15%), 추가 비용 감면(35%)

□ 4,000MW 규모 5개의 대형 발전소 건설 계획

- 인도 정부는 4,000MW 대형 발전소 5곳을 건설 예정이며, 동 발전소 수주를 따낸 계약자가 여타의 각종 규제에 대한 정부 승인들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 금번 조치로 발전소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투자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 2015-16 회계연도에 쿠단쿠람 원자력 발전소 2호 설립 예정

7 IT산업

□ IT 산업 활성화 정책에 업계는 중립적 반응 표명

- 예산안에 포함된 IT 산업 정책에 대한 인도 산업계 의견은 일부 중요한 진전이 있으나 당초의 업계가 기대했던 혁신적인 변화(Big Bang) 수준은 아니며 구체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4월초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Fine Print)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다소 신중한 견해를 보임.
- 이번 예산안에 포함된 IT 시장 활성화 대책은 R&D와 Innovation 투자를 확대하고 IT산업 혁신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로열티 및 기술 서비스에 대한 세금 인하 (25%에서 10%로 인하) 조치임.
- Start-up Ecosystem 조성을 위해 Rs 1,000 Crore(1.6억불) 예산을 투입 예정이나, 업계는 Start-up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한 것에 실망
- 서비스세금 인상 (12.36%에서 14%로 인상) 조치는 인도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을 유발할 가능성 있으며 소규모 창업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2015~16 회계연도 예산의 IT산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중립적인데, 업계는 로열티 및 기술 서비스에 대한 세금인하, 창업지원 기금 조성, 법인세 인하 등의 계획을 예산안에 포함시킴으로써 시장 친화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때 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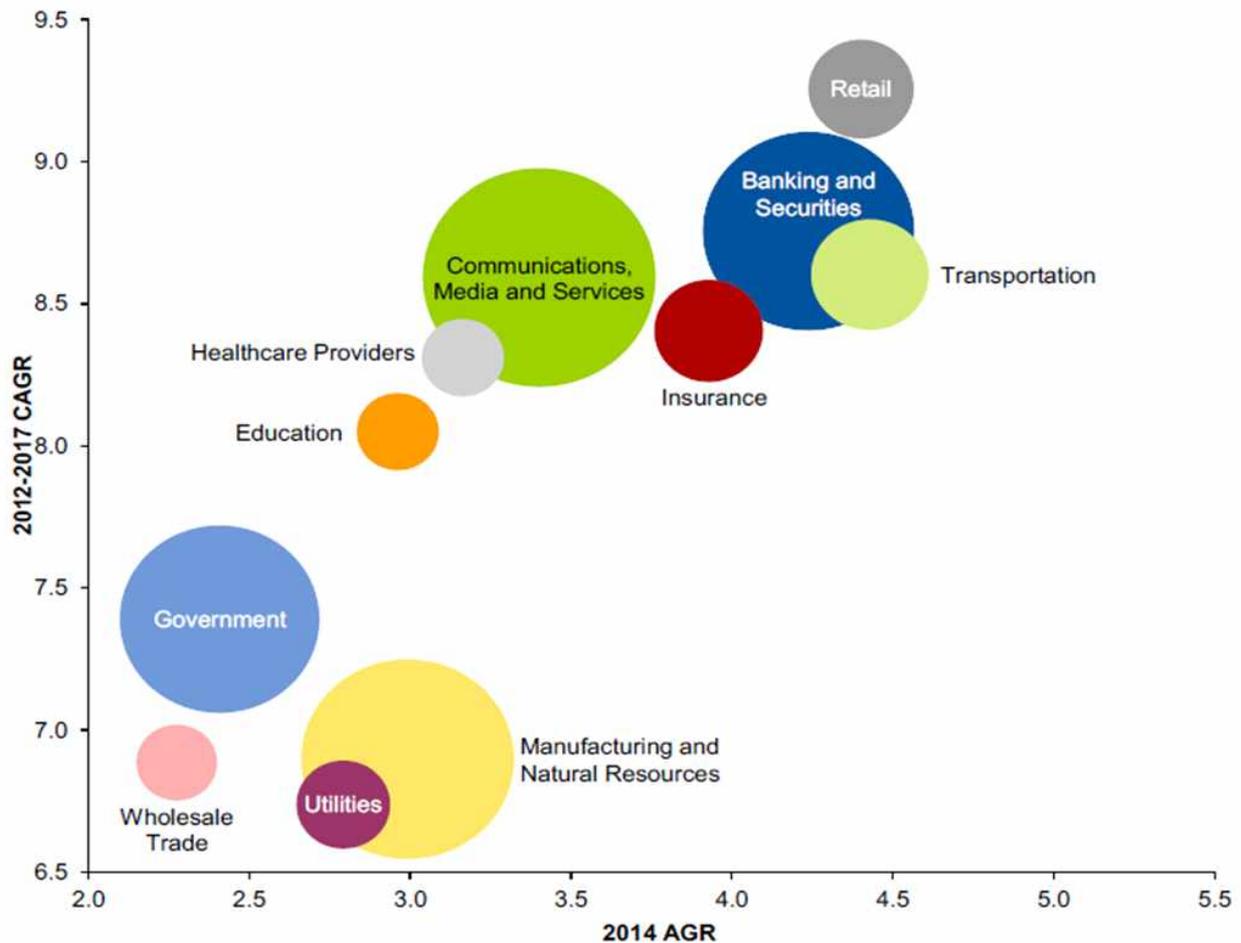
[인도 IT지출 현황 및 전망 ('13-'18)]

(단위: \$백만 달러)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4-18 CAGR(%)
디바이스 (Devices)	20,923	21,652	25,280	27,943	31,261	33,831	9.34
데이터 센터 시스템	2,229	2,281	2,398	2,537	2,683	2,808	4.24
소프트웨어	3,719	4,019	4,558	5,146	5,815	6,573	10.34
IT 서비스	10,359	11,321	13,072	15,084	17,460	20,287	12.37
통신 서비스	27,930	27,354	28,352	28,936	29,723	30,404	2.00
합 계	65,160	66,627	73,659	79,646	86,942	93,902	7.10

* 자료원 : Gartner

[인도 산업별 IT 지출]



* 주 : AGR=annual growth rate

* 자료원 : Gartner

[인도 주요산업 IT 투자 현황]

산 업	주요 트렌드	투자 분야
 정 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을 연결하는 디지털 인디아(Digital India) 프로그램 - 시민들에게 정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계획 - 국가차원의 Mobile Service Delivery Gateway 계획 - 스마트 시티(Smart Cities)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화 - 모빌리티(Mobility) - 클라우드(Cloud) - 사물인터넷(IoT)
 B F S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은행 라이선스 발급 - 자기자본에 대한 새로운 규제 도입 - 지방 은행을 대상으로 디지털 인디아 프로그램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채널 - 분석 - 모빌리티(Mobility)
 제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Made in India) 제품에 대한 정부 방향 설정 -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춘 정책 수립 - 전국 산업회랑 개발을 위한 산업회랑관리청(NICA, National Industrial Corridor Authority)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추출 및 분석 -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 SCM 솔루션
 교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산 승인 - 인도 국영 철도(Indian Railways)에 민간투자 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상거래 및 모바일 솔루션 - 자산추적 및 GIS솔루션 - 빅데이터

* 주 : BFSI=banking, financial services and insurance, SCM=supply chain management,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자료원 : Gartner

3

새해 예산안에 대한 우리기업 반응

진출기업	예산안 평가
<p>① 자동차부문 진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업용 자동차에 대한 기본 관세율을 10%에서 40%로 인상하면 총 부과 되는 관세는 60%에서 100%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는 생산 기지가 인도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이번 예산안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인도 내 생산기지가 있지 않고 인도로 수출을 하는 자동차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 판단 됨 ○ 금번 예산안이 자동차 산업에 대해 직접적인 세율변화나 정책변화를 준 것이 아니어서 직접적은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겠으나 비즈니스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 인하, GST도입, 수입 상용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10%→20%) 등의 조치가 인도 진출 자동차 관련 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응
<p>② 전자제품부문 진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를 5% 내린 건 좋게 느껴지지만 매출관련 세금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세수를 먼저 많이 확보하려는 시도로 느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자본투입에 부담이 적은 대기업들은 호재일지 모르나 당장 생산 비용에 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이번 예산안에서 별로 긍정적인 인식을 받지 못함 ○ 전자제품을 6만 달러 정도를 수입하는데 관련 관세율이 인상되어 큰 부담으로 작용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성에가 끼지 않는 냉장고 등과 같은 고급 소비자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 조치가 있었지만, 이런 제품들의 비중이 아직 미미하여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수입 핸드폰의 소비세를 6%에서 12.5%로 올림에 따라 휴대폰 가격인상 및 현지생산 확대의 효과가 있을 전망
<p>③ 철강부문 진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철강 제조업체가 요구한 사항은 사실상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인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인프라 관련 투자를 늘렸기 때문에 인프라 및 주택 관련 철강수요 및 투자가 늘 것으로 전망 ○ 철강에 대한 기본 관세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인도 CEP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인도 CEPA 적용시 철강 제품에 대한 2015년 기본 관세율은 7.5%로 변화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인하로 내년부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 전반적으로 내수 제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보였으나 그리 크지는 않음 * 연락사무소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에 아무런 혜택이 없음
<p style="text-align: center;">④ 철도부문 진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도관련 투자흐름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업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 - 법인세율 인하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체감이 되지 않음
<p style="text-align: center;">⑤ 물류부문 진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투자 증가에 힘입어 프로젝트 관련 물류에 대한 수요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함 ○ 장기적으로 물류비 절감 차원에서 불필요하게 파생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p style="text-align: center;">⑥ 건축부문 진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예산안에서 인프라 투자의 일환으로 4000MW급 대형 발전소 5곳 건설 및 재생가능한 에너지 용량을 2022년까지 17만 5000MW로 증가 목표를 발표함에 따라 그 파급 효과로 건축관련 전선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영향 기대함 ○ 그러나 실제 예산이 확정되어 투자, 실행 계획 및 발주가 새로 나오고 업체 선정, 시공까지 최소 1-2년 정도 걸릴 것임으로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임 - 지금까지 인도 정부의 계획 추진력을 볼 때 프로젝트 취소, 연기 등의 신뢰성의 문제들이 많았음 - 따라서 향후 실제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서 사업계획을 세울 예정
<p style="text-align: center;">⑦ 수처리부문 진출기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세 상승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현지 소기업체에게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비용적 압박이 있음 ○ 인도 정부의 달러 자금 대출 제한으로 자금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도 많이 떨어져 이 부분의 개선을 기대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었음 - 제품 수입시 Excise세를 정부에 맡겨 놓고 추후에 환급을 받는 제도로 인해 그 만큼의 돈이 묶여 있는 것과 돈을 맡겨 놓는 것 자체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 ○ 사포, 맨브레인 환경 필터링 쪽에 관세 혜택을 기대했는데 현재 명시되어 있는 무관세 조항 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음



III

우리기업 진출 여건

1. 한국의 대인도 교역 현황
2. 기회요인
3. 위협요인

1 한국의 對인도 교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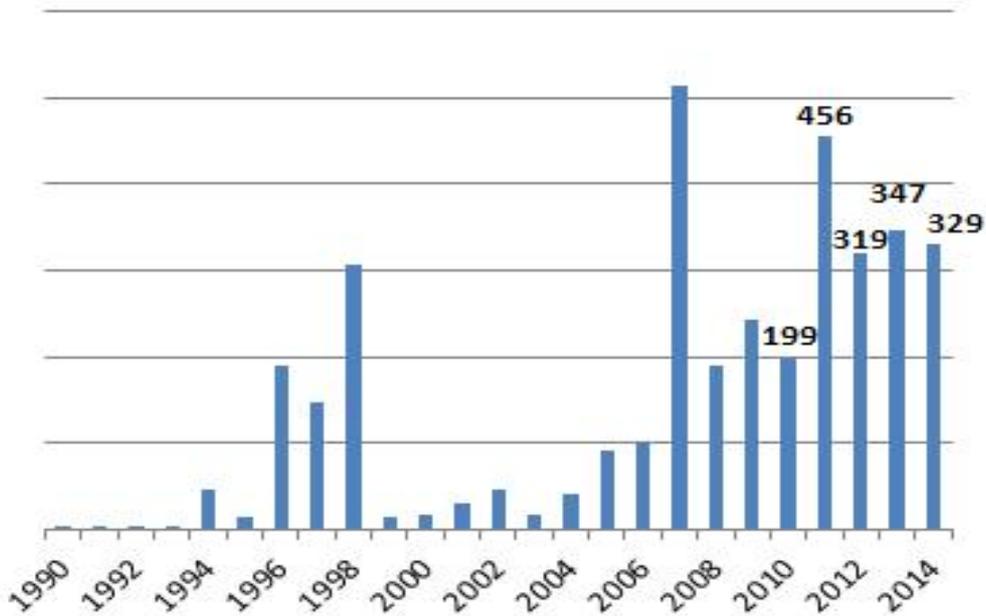
1 한국의 對인도 투자 현황

□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37억 달러 규모, 총 2,194건('68.1~'14 누계)으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 투자금액 2,820억 달러의 1.31% 차지

- 업종별로는 제조업(85.3%), 도매 및 소매업(5.7%), 금융 및 보험업 (2.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1.8%) 순

[한국의 對인도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의 對인도 투자진출 현황]

(단위 : 건, 개, \$백만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10	191	60	210	199
2011	204	66	686	456
2012	212	53	457	319
2013	188	40	574	347
2014	156	39	372	329

*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인도 투자 현황 - 대기업, 제조업 위주의 투자

- 한국의 對인도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 투자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소기업은 14% 차지
- 한국기업의 진출 업종은 제조업 비중이 53.7% 수준으로 인도는 서비스업 위주(57%)이고 FDI도 상당부분이 서비스업에 투입되는 것과는 상반되는 점이 특징
- * 인도 업종별 GDP 기여율은 제조업 24.7%, 서비스업 57%수준 ('13년 기준)

[주요 한국기업 인도 진출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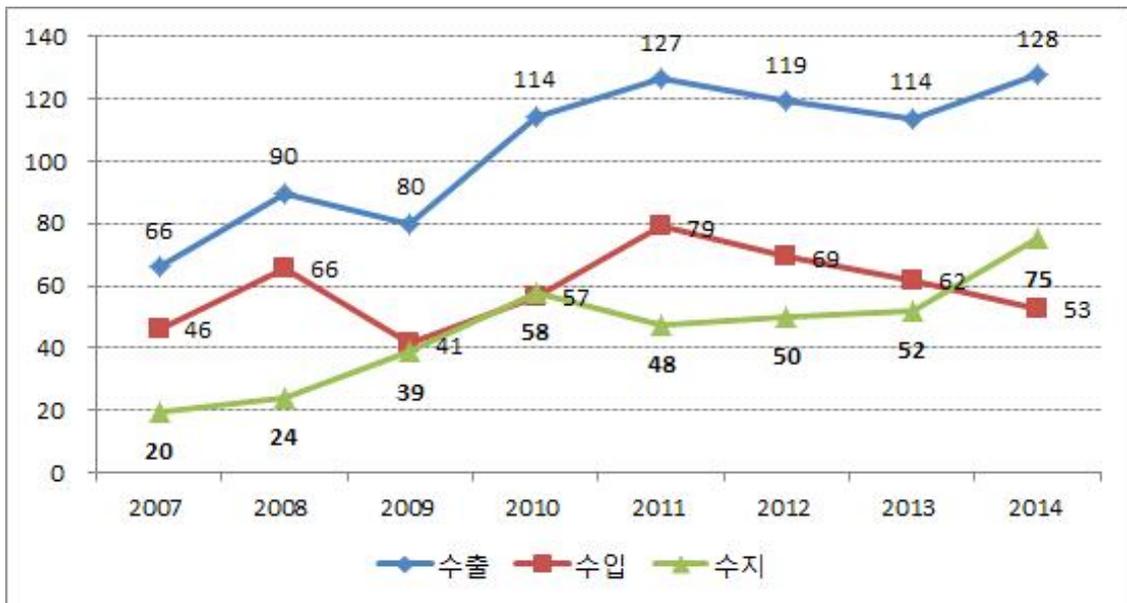
도시	주요기업	주요업종
델리 인근	LG,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중공업, 쌍용건설, 삼성물산, POSCO,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제조업 59.7%
첸나이	현대자동차, 롯데제과, 삼성전자, 한진해운, 두산 중공업, 롯데건설	
뭄바이 푸네	현대중공업, 신한은행, LG전자 뿌네 공장, CJ-STAR	
방갈로르	LG(소프트웨어, CNS), 삼성 연구소, 삼성전기, 두산 인프라코어, SK, 하이닉스	
오리사	POSCO	
기타 지역	LG 화학, 한전기공, 대웅제약	

2 |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현황

- 2014년 한국의 對인도 교역규모는 203억 달러로, 수출 128억 달러, 수입 75억 달러로 무역수지 흑자 유지
- 인도로부터의 수입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對인도 수출은 2011-13년간 감소추세였으나 2014년에는 전년대비 11% 증가

[우리나라의 對인도 교역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원: KITA

[우리나라의 對인도 상위 수출 품목]

(단위: \$억 달러, %)

순위	MTI코드	품목명	2012	2013	2014	점유율(%) ('14)	증감률 ('14/'13)
1	7420	자동차부품	15.9	12.5	10.6	8.3	-14.9
2	2140	합성수지	8.7	9.2	10.6	8.3	15.6
3	1336	윤활유	6.8	6.1	7.3	5.7	20.2
4	6133	냉연강판	5.5	5.0	6.0	4.7	20.1
5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3.4	4.1	5.0	3.9	21.1

* 자료원: KITA

[우리나라의 對인도 상위 수입 품목]

(단위: 억달러, %)

순위	MTI코드	품목명	2012	2013	2014	점유율(%) ('14)	증감률 ('14/'13)
1	1334	나프타	37.5	23.8	17.3	32.8	-27.4
2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2.5	3.2	3.5	6.6	8.1
3	0135	박류	2.4	3.3	2.9	5.5	-12.2
4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1.7	1.8	2.0	3.8	9.1
5	6181	합금철	2.7	2.5	2.0	3.7	-22.8

* 자료원: KITA

2

기획요인

* 기획요인은 모디 정부의 새해 예산안과 개혁정책에 따른 인도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

기획 분야	진출 기획 요인
<p>제조업 육성 정책인 Make in India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Make In India로 대변되는 인도 제조업 육성정책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임 - 전자·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서 완제품 수입관세를 올리고 부품 수입 관세를 낮추는 등의 현지 생산 유도정책이나 인프라 투자확대, 세제 개편을 통한 투자유도정책을 감안할 때 인도 제조업 투자의 적기로 판단됨 - 1년 후 GST 도입이 예정됨에 따라 간접세가 통일되어, 기업들의 세무 애로사항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임
<p>발전 플랜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배전 시설의 노후화 개선과 연계, 전력 산업 진출 고려 - 전력산업의 경우 발전소 건설에 대한 민간 부문의 진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송배전 시설의 노후화 개선 분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송배전 기자재 공급 혹은 건설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 통신, 전력부문 민간투자 비중 각각 79.6%, 42.7%에 달하여 민간이 개발 주도 - 정부발주 사업의 경우 자국 산업 보호정책에 따라 입찰자격을 현지 기업, 현지기업과의 합작회사(JV), 현지 공장 보유업체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쟁력 있는 현지기업 발굴, 파트너십 결성이 요구됨
<p>프로젝트 진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사업 활성화 기대 - 인프라 부문 7,000억 루피 투자 확대로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진출 가능성도 함께 커질 것 - PPP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철도 프로젝트 진출 유망
<p>기술·서비스 스타트업 기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재무부, 기술 서비스 사용 인세 및 수수료 인하(25%→10%) - 기술 서비스 제공 스타트업 기업에의 세금 인하를 통해 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우리 기업들이 인도 스타트업 기업과의 기술개발 협력 혹은 조인트 벤처를 통해 진출한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위협요인

* 위협요인은 모디 정부의 새해 예산안과 개혁정책에 따른 인도 현지 진출 우리 기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

내용	위협 요인
<p>사업의 실효적 관리장소(PoEM) 개념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실효적 관리장소(PoEM) 개념 도입은 OECD 및 국제적 관행에 맞추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인도 소득세법 상 거주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특히, MAT)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실효적 관리장소(PoEM): 사업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요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질적으로 내려지는 장소를 의미 ○ 회사의 거주자 지위(Residential Status of Companies)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사업연도 중 특정 시점이라도, 외국회사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인도 내에 두는 경우, 당 외국회사는 인도 거주자로 정의되어, 글로벌 사업소득에 기초한 과세(Residence Based Taxation)관련 이슈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p>정부 정책 불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년간 쌓인 정책 실행 지연 경험으로 불신이 남아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D(Special Additional Duty, 특별부과관세), 법인세, GST(Goods and Services Tax, 상품 및 서비스세) 인하 등이 계획대로 실행 될지 아직 의구심은 많은 편 - 일부 법안 변동에 대해선 정확한 시행일이나 세부 내용이 없어 실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p>일부 조세 증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소비세 12% → 12.5%, 서비스세 12%→ 14%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 증가로 인해 일부 기업부담금 상승이 우려 됨



IV

인도 진출 방안

1. 권역별 진출 차별화 전략
2. 전략육성산업 및 수요급증
유망분야 진출
3. 시사점

1 권역별 진출 차별화

[인도 진출 전략 방향]

- 다양한 경제적, 문화적 스펙트럼을 고려한 권역별 진출 차별화 전략
- 모디 정부의 'Made in India' 육성 정책 등 산업육성정책 적극 활용
- 내수시장을 위한 생산 거점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재수출을 위한 전략적 생산기지로 검토

- 인도 진출의 경우, 진출 목적(내수, 수출·생산거점) 및 목표시장, 제품 및 사업특성에 따라 권역별 차별화 전략 필요
 - 자동차 및 IT/BT 산업은 외국계 자동차 및 글로벌 IT산업이 대거 진출해 있는 남부가 유망
 - 바이오산업은 최근 인도정부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서부지역이 유망
 - 소비재산업은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북부지역이 유망

[인도 4대 경제권 특징]



* 자료원 : KOTRA

□ 권역별 유망산업 및 중점산업

권역	유망산업 및 중점산업
동부	(광물 및 금속가공, 채광업) 풍부한 지하자원 (섬유산업, 비료산업) 과거부터 전통적 강세 (바이오산업) 최근 집중 육성
서부	(석유화학, 금융업, 기계 및 수송장비, 제지, 영화산업) 전통적 강세 (IT 산업) 최근 전략적 육성 산업
남부	(자동차, IT/BT 산업) 외국계 자동차 및 IT, BT 회사의 대거 진출 및 주 정부 전략 육성 산업
북부	(내구 소비재/일반 소비재 산업) 많은 인구로 전통적 강세 (농업) 넓은 농토를 보유하여 상대적으로 발달

□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에 따른 차별화전략

진출목적 및 목표시장	진출형태	사업특성	우선검토권역
내수	판매법인 및 현지 에이전트	높은 소득 및 소비성향 중요	서부권역 (구자라트)
	생산 및 판매법인	소비환경에 민감	
수출· 생산거점		생산 및 수출	아시아 수출비중이 높음
	중동, 유럽 수출비중이 높음		서부 항구도시 (뭄바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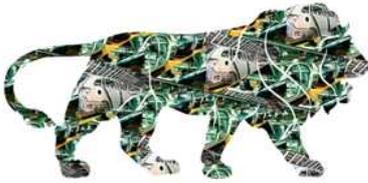
2

전략육성방안 및 수요급증 유망분야 진출

1

자동차부품

AUTOMOBILES



시장동향 및 전망

- [자동차] 16년 시장규모 세계 3위 도달
- [자동차] 세계 7번째 제조국, 15년 4위 전망
 - ✓ 연간 평균 생산대수 1,750만 대
 - ✓ 10-11년 매출 585억 달러, 2016년 1,450억 달러 전망
- [자동차부품] 12-13년 시장규모 397억 달러
 - ✓ 20-21년까지 1,150억 달러 성장 전망
- 자동차 클러스터 허브
 - ✓ 델리-하리아나, 뭄바이-푸네
 - ✓ 아메드바드-사난드, 첸나이-방갈루루



성장 요인 및 지원 정책

- 철강 생산량 세계 4위로 가격 경쟁력 높음
 - ✓ 16년 철강 생산량 세계 2위 전망
- 제조·수입 라이선스 불필요, 자동차에 대한 소비세 감소 정책, FDI 100% 허용
- 자동차 주요 시장인 ASEAN, 일본, 한국, 유럽과 인접

2

전자제품

ELECTRICAL MACHINERY



시장동향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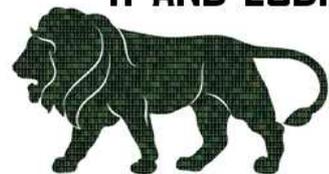
- [전자제품] 20년 시장규모 290억 달러 달성
- [ESDM] 15년까지 942억 달러 가치 보유
 - ✓ 3천억 달러 초과 수요 예상, 수요의 65% 수입으로 충당
- [IT & BPM] 14년 예상 수익 1,180억 달러
 - ✓ 인도 GDP의 8%, 글로벌 시장의 7% 기여
 - ✓ 2020년까지 산업 규모 2,250억 달러 전망
- 20년 반도체산업 528억 달러 규모로 성장
 - ✓ 연간 26% 성장, 수입 의존도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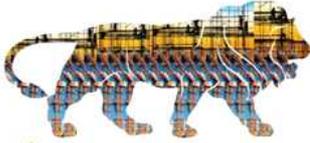
성장 요인 및 지원 정책

- National Policy on Electronics(NPE)
 - ✓ 20년까지 1,000억 달러 투자, 2,800만 명 고용 창출
 - ✓ 수출액 4천억 달러 달성, 200개 전자 제조 클러스터 육성
- Pan-India 사업 8천만 달러 예산 배정
 - ✓ 디지털 인디아, 농촌 지역 인터넷망 구축 사업 등 포함
- 통신장비 인도 자체 공급량 수요의 5% 미만

IT AND ESDM



CONSTRUCTION



시장동향 및 전망

- 12차 경제개발계획[12-17년] 인프라 부문 1조 달러 투자
 - ✓ 아시아 태평양 시장 중 12.5% 차지
 - ✓ 인도 전체 GDP의 10% 차지(인도 경제 활동 기여도 2위)
 - ✓ 향후 20년간 도시 인프라 부문에 6,500억 달러 투자
- 철도 화물 수송량 세계 4위, 일일 승객 수 세계 1위



성장 요인 및 지원 정책

- 12-17년, Mass Rapid Transit System 사업 실시
 - ✓ 아메드바드-방갈루루-첸나이-뭄바이-푸네-수랏
- 뭄바이-뭄바이 산업회랑(DMIC), 방갈루루-뭄바이 경제회랑(BMEC), 동부 산업회랑(EDFC), 첸나이-방갈루루 산업회랑(CBIC), 암리차르-콜카타 산업회랑(AKIC) 개발
- 17년까지 10만km 고속도로 건설 목표(190억 달러 투자)
- 100개 스마트 시티 구축 사업 발표(11억 7천만 달러)
- 10-14년 간 항만 인프라개발 집중 투자(69억 달러)
 - ✓ 항만 인프라 분야 FDI 100% 허용 발표
- 갠지스강 수질정화사업 실시(3,200만 달러)

RAILWAYS



DEFENCE MANUFACTURING



시장동향 및 전망

- [방산]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
 - ✓ 방산 예산 중 40%를 장비 수입에 사용
- [항공] 20년 시장규모 3위 전망
 - ✓ 현재 40개국을 연결하는 85개 국제 항공 라인 보유
 - ✓ 2017년까지 승객 6천만 명 도달
 - ✓ 2020년까지 800대 비행기 보유



성장 요인 및 지원 정책

- [방산] 14-15년, 383억 달러 예산 배정
 - ✓ 2015년, 방산 제품 구매액 12%로 증가 전망(BMI)
- [방산] FDI 허용 한도 26% → 49%로 상향 조정, 향후 2년 내로 74%까지 상향
- 인도 정부 미국, 일본, 한국과 방산 협력 확대 추진
- 12차 경제개발계획[12-17년], 방산 현대화 사업 강조
 - ✓ 향후 15년 간, 184억 달러 투입
- 국내 위성 통신 시장 자유화
 - ✓ AAI driving 시스템과 항공 네비게이션 시스템 현대화
- 인도 공항 협회 주도로 2030년까지 250개 공항 증설

AVIATION



5

의료기기 & 헬스케어

MEDICAL EQUIPMENT



시장동향 및 전망

- [의료기기] 13년 시장 규모 63억 달러 추산
 - ✓ 연간 10-12% 성장 지속, 25년 500억 달러 전망
- [헬스케어] 시장규모 1,782억 달러(17년) → 2800억 달러(20년) 전망
 - ✓ 총소비 1,030억 달러
 - ✓ 1인당 지출 58 달러(2011)에서 89 달러(15년) 로 증가
- 인터넷 인프라 확충으로 원격의료시장규모 확대 추세



성장 요인 및 지원 정책

- 12차 경제개발계획(12-17년) 550억 달러 예산 배정
 - ✓ 11차 때 보다 3배 증가
- 국가 암센터(NCI) 설립 예정 (3,380만 달러)
- 00-14년간 FDI 유입액 18억 7천만 달러
- 의료 관광 연간 40% 성장, 15년 24억 달러 수익
 - ✓ 매년 인도 방문자 85만 명
- 10-14년간 건강 보험시장 연간 25% 성장

HEALTHCARE



6

소매유통 전자상거래

RETAIL & E-COMMERCE



시장동향 및 전망

- [소매] 시장규모 4500억 달러(12년)에서 8690억 달러(15년) 성장
 - ✓ 연간 20% 성장, 20년 1조 3천억 달러 전망
 - ✓ 인도 GDP 22%, 고용 8% 기여
- [전자상거래] 15년 시장 규모 200억 달러, 연간 37% 성장
 - ✓ 5년 내로 430억 달러 성장 전망, 20년 2천억 달러 전망



성장 요인 및 지원 정책

- [소매] 멀티 브랜드 51%, 단일 브랜드 100% FDI 허용
 - ✓ 00-14년간 1억 3,770만 달러 FDI 유입
- [전자상거래]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공격적 투자 전략
 - ✓ [플립카트] 의류 전문 온라인 쇼핑몰 민트라 인수(3억 2천만 달러)
 - Tiger Global, Naspers 등 플립카트에 2억 달러 투자
 - ✓ [스넵딜] 14년 4월, 5천만 달러 투자
 - ✓ [아마존 인디아] 20억 달러 투자
 - ✓ [유니클로] 인도 내 1,000개 매장 개점 계획 발표
 - ✓ [Soft bank] 스넵딜 6억 2,700만 달러 투자로 최대주주 등극

품목명	추천 사유
치과 의료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 규모 1억 1,645만 달러, 연간 25-30% 성장 전망 ✓ 수요의 90% 이상을 수입, 진료비 서양 국가의 1/8 수준 → 의료 관광 증가
PVC 호스 파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VC 제품 소비는 6백만 톤에서 2017년 천만 톤으로 증가 전망 ✓ 인도 내 고품질 공급자 거의 없음, 대부분을 수입
LED 조명기구/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규모 14억 달러, 연간 45-50% 성장 전망 ✓ 인도 정부에서 수요의 51%를 주문
스테인리스 강철 파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강 시장 규모 2011년 578억 달러에서 2016년 953억 달러로 증가 전망 ✓ 2008-14년간 철강 수요 연간 6% 증가, 2017년 1억 4백만 톤으로 증가
태양광 발전 장비 및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정부, 재생 에너지 부문에 326억 달러 투자, 100% FDI 허용 ✓ 2017년까지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 목표 10GW
화재경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규모 24억 달러, 연간 16% 성장, 2017년 35억 8천만 달러 전망 ✓ 주요 도시 병원, 공항, 쇼핑몰 등 40%만 화재 경보기 설치
포장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산업 매년 22-25% 성장, 현대식 소매 유통 확산, 위생관념 중시 ✓ 포장수요 증가 (일회용 제품 사용 및 맞벌이 부부 증가)

품목명	추천 사유
정수기 필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 내 2억 2천만 가구 중 5%인 천만 가구만 가정용 정수기 이용 ✓ 2015년까지 연간 13% 성장, 2017년 시장 규모 2억 1,600만 달러 전망
건설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2011년 42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227억 달러로 증가 ✓ 2011년부터 연평균 24% 수요 증가, 2015년 규모 99억 달러 전망
환자 진단 및 모니터링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립병원 증설 확대로 시장 규모 3억 3천만 달러에서 2016년 9억 달러로 증가, 중환자실 내 환자 모니터링 설비 의무화
농업용 펌프 (태양광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억 달러 시장 규모, 2013-18년간 12% 성장 전망 ✓ 중앙·주정부 최대 90% 보조금 제공, 10만대 설치 계획 발표
리튬 이온 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18년간 24% 성장 전망, 인도 수요 대비 공급자 부족 ✓ 정부의 배기가스 배출 감소 정책으로 전기차 부문 발전
차량용 블랙박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산층 증가로 블랙박스가 내장된 고급차 시장 수요 증가 추세 ✓ 수입 규모 2013년 기준 3,382만 달러, 전년 대비 26% 성장
섬유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선자금 프로그램(TUFS)을 통한 섬유 기기 현대화 지원 ✓ 풍부한 자원 효율성을 바탕으로 가격 조정 가능, 출시까지 리드타임 최소화

3

시사점

- 인도 인구가 2025년 14억 6,900만명을 넘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 중소중견기업들도 거대한 소비시장과 생산기지를 보유한 인도에 적극 관심을 기울여야 함.
-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의료기기, 헬스케어 등 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와, 철도 및 스마트시티 건설, 신재생에너지 등 인도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산업에 진출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연간 37%씩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소비재 시장 진출도 모색할 수 있으며,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철도 및 스마트시티 건설,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민관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통한 진출이 유망함.
- 인도는 권역별로 유망산업 및 중점산업이 상이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인도의 규제, 진입장벽 등의 리스크와 시장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사전 검토를 해야함. 투자진출의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초기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진이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현지기업 M&A도 고려해 볼만 함.

작 성 자

- ◆ 신흥시장팀 이미경 전문위원, 임혜진
- ◆ 뉴델리무역관 유리 대리
- ◆ 첸나이무역관 박민준 관장
- ◆ 벵갈루루무역관 장충식 관장
- ◆ 뭄바이무역관 조동준 과장
- ◆ 서남아지역본부 자료제공

Global Market Report 15-013

‘재부상하는 인도’ 2015~16 회계연도 인도 예산안 주요내용 및 우리기업 진출 기회 분석

발 행 인 | 김재홍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Market Report